

첫 번째 아이오닉. IONIQ hybrid

국내 최고 연비 22.4km/l, 다이내믹한 주행성능을 넘어
지능형 기술을 갖춘 드라이빙 디바이스로



IONIQ 컨피던스 프로그램



배터리 평생보증 NEW

• 대상: 최초 구매 고객 (개인 고객 한정, 법인/리스 제외)
• 하이브리드 배터리



10년 20만km 무상보증

• 하이브리드 전동 부품 10년 20만km 보증
(모터 / 배터리 / 전력 제어 모듈)



차종교환 프로그램

• 대상: 순수 일반 개인 고객 • 기준: ① 출고 후 30일 이내
② 수리비 30만 원 미만 ③ 주행거리 2,000km 미만



신차교환 프로그램

• 대상: 순수 일반 개인 고객 • 기준: ① 출고 후 1년 이내 ② 차대차고
자기과실 50% 미만 시 ③ 차량 가격의 30% 이상 수리비 발생 시



■ 구입 문의전화 및 고객센터, 긴급복합원 헬프서비스 080-600-6000 ■ 정부 공인 표준연비 및 등급 ▶ 아이오닉 1.6GI 하이브리드(157) 복합 22.4km/l (도상: 22.5km/l, 고속도로: 22.2km/l) | CO₂ 배출량: 69g/km | 배기량: 1,580cc | 공차중량: 1,380kg | 6단 DCT(1등급) ▶ 아이오닉 1.6GI 하이브리드(177) 복합 20.2km/l (도상: 20.4km/l, 고속도로: 19.9km/l) | CO₂ 배출량: 78g/km | 배기량: 1,590cc | 공차중량: 1,410kg | 6단 DCT(1등급) ※ 위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행방, 차량적재, 정비상태 및 화기온도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급출발, 급가속 및 급제동을 하지 않습니다 ※ 정속주행을 합니다 ■ 현대자동차는 지점/대리점의 카마스터를 통해서만 판매하며, 전국 어느 곳에서나 같은 제품 같은 가격으로 바쁜 거래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bluehands 차량관리 서비스는 blue hands가 책임지겠습니다
화인서비스/블루핸즈*케어서비스/금융융/물류포인트/전면서비스



▶ 한국수출입은행(은행장 이덕훈)은 지난 3월 28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 본점에서 김주현 사랑의열매 사무총장을 만나 총 6억 510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이 날 수출입은행이 전달한 후원금은 사랑의 열매를 통해 다문화가정·탈북민 자립 등 수은이 중점 후원하는 분야를 포함해 장애인 자활, 지역아동센터 지원·설립 등 총 24개 복지사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수출입은행은 지난 3년간 사랑의열매에 총 20억을 후원하였습니다.

이덕훈 은행장은 후원금을 전달한 뒤 “수은의 자체 사회공헌프로그램인 ‘희망씨앗’이 마련한 소중한 후원금이 우리 사회 곳곳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잘 전달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사랑의열매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보다 의미있는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속쓰림엔 겔포스엠

과도한 업무, 잦은 회식으로 인한 속쓰림!
겔포스엠의 강력한 위벽보호 작용으로 쓰린 속을 편안하게 감싸줍니다

겔포스엠®
현탁액

- 원료 약품 및 그 분량 : 100g중
- 인산알루미늄겔(EP)..... 61.9g
(인산알루미늄으로서 12.38g)
- 수산화마그네슘(KP)..... 2.0g
(마그네슘으로서 833.5mg)
- 시메티콘(USP)..... 0.2g
- 첨가제[보존제]
- 파라옥시벤조산메틸(KP)..... 0.08g
-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KP)..... 0.02g

GMP

제조 및 판매자
BORYUNG
보령제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강동 1122-3
www.boryung.co.kr

복합제산제조성물특허 제130427호
특허받은 위장약
겔포스엠

광고심의필 : 1325-0200 |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커버스토리
투표를 잘해야 합니다.
흠수저에게 꿈과 희망을!



경실련 | 공동대표 임현진 선월몽산 최정표 최인수 중앙위원회의장 박상기 상임집행위원장 양혁승 정책위원장 서순탁 사무총장 고계현
월간경실련 | 발행인 고계현 편집인 김한기
편집기획위원 권오인 김상수 김한기 남은경 윤철한 오세형
발행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110-809 서울시 종로구 동소3길 26-9 전화 02)765-6400 팩스 02)741-8564~5
편집디자인 ㈜현대아트컴 인쇄 ㈜현대아트컴 1990년 5월 24일 등록 서울라10131 2016년 4월 6일 발행

CCEJ(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26-9 Dongsung 3gil Chongro-gu, Seoul, Korea
Phone : 82-2-765-6400 Fax : 82-2-741-8564-5 http://www.ccej.or.kr

CONTENTS

20대 총선 특집

경실련 유권자 운동본부 발족 기자 회견문

08 “투표를 잘 해야 합니다”
“흠수저에게 꿈과 희망을!”



53 20대 총선 특집
경실련 선정 걸림돌 디딤돌 의원 1

경실련 20대 총선 정책 과제

11 경실련이 제안하는 20대 총선 정책과제



53 20대 총선 특집
경실련 선정 걸림돌 디딤돌 의원 2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를 위한 경제구조 개혁 과제

22 양극화·불평등 해소를 위한 '5대 부문 15대 경제구조개혁과제'

경실련 선정 걸림돌 의원

37 20대 국회의원 선거 걸림돌 후보자



?? 20대 총선 특집
경실련 유권자 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 1

경실련 선정 디딤돌 의원

53 20대 국회의원 선거 디딤돌 후보자

경실련 경향신문 공동 공약 검증

61 경실련, 경향신문 공동 공약 검증 20대 총선 4대 정당



?? 20대 총선 특집
경실련 유권자 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 2

정당 공약 평가_청년

71 [경실련 20대 총선 정당 공약평가] 1. 청년 공약

정당 공약 평가_주거

83 [경실련 20대 총선 정당 공약평가] 2. 주거 공약



?? 20대 총선 특집
경실련 정당 공약 평가 1

정당 공약 평가_노인

90 [경실련 20대 총선 정당 공약평가] 3. 노인 공약

정당 공약 평가_보육

96 [경실련 20대 총선 정당 공약평가] 4. 보육 공약

20대 총선 시민모임_이천여주경실련 주상운 사무국장

102 20대 총선을 위한 시민연대 모임

“투표를 잘해야 합니다!”_김삼수 정치사법팀장

105 “투표를 잘해야 합니다.”
“흠수저에게 꿈과 희망을”
- 경실련 20대 총선 유권자운동본부 발족 -
- 5대 분야 정책과제 발표 -



?? 20대 총선 특집
경실련 정당 공약 평가 2

“투표를 잘 해야 합니다”

“흙수저에게 꿈과 희망을!”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4·13 총선은 향후 4년간 우리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정치적 사건이다. 그러나 현안에 대한 해법과 미래에 대한 비전은 찾을 수 없다. 여야를 막론하고 현재까지 후보들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무원칙한 공천으로 불복과 갈등을 거듭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독선적 운영과 함께 ‘공천살생부’, ‘논개작전’, ‘사전 여론조사 유출’ 파문이 ‘막말’까지 이어지면서 친박-비박간 계파 충돌에 직면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무원칙한 공천과 개인에 의한 하향식 공천방식으로 컷오프 의원들의 재심신청과 무소속 출마 검토로 내홍을 겪고 있다.

이런 와중에 박근혜 대통령까지 ‘진실한 사람을 뽑아달라’며 공천개입 논란을 부추기더니 급기야 대구·경북 지역을 방문해 노골적인 경선개입을 자행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예비후보간 흑색선전과 상호비방이 난무하며 과열·혼탁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결국 유권자들은 안중에 없이 기득권 유지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정치권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이대로 간다면 20대 국회는 역대 최악의 국회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경실련은 이번 선거가 민생을 살리는 정책선거가 되기를 기대했다. 가계부채 1200조원, 청년 실업률 9.3%, 재정적자 167조 원, 전월세가격 42개월 연속 상승 등 파탄난 서민경제와 장기 침체에 빠진 경제는 좀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양극화와 불평등의 심화로 모두가 힘들다고 외치는 상황에서 정치권도 당연히 국민들의 생존 문제에 최우선적으로 나설 것이라 여겼다. 하지만 각 당이 마지못해 내놓은 공약은 부실하기 짝이 없다. 민생은 실종되었고, 과거 내놓았던 공약의 재탕, 삼탕에 불과하다.

경실련은 이제 하위40%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다 같이 잘 사는 정의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활동에 적극 나서고자 한다. ‘20대 국회의원 선거 유권자운동본부’를 구성하고, 경제양극화와 불평등 해소, 민생회복과 복지강화, 신뢰할 수 있는 정치개혁, 중앙권한 지방이양을 통한 분권강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실현 등 5대 개혁과제를 중심으로 각 정당과 후보자의 공약을 철저히 검증 할 것이다. 기득권이 아닌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도록 유도하고, 일자리·주거안정·복지 등 생활밀착형 정책으로 민생이 우선되는 선거를 만들고자 한다.

또한 정당과 후보자들의 자질과 정책을 철저히 검증하여 민생과 서민 중심의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유권자 운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유권자들이 객관적이고 합리적 기준으로 후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선거과정에서 각종 부정·비리를 감시하고,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유도할 것이다.

정치에 대한 극도의 불신은 새로운 정치에 대한 갈망으로 표출된다. 이번 20대 총선이 기존 정치에 대한 불신을 새로운 정치에 대한 희망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유권자들은 이제 더 이상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정치인을 단호히 국민의 이름으로 반대해야 한다.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정치인, 국민을 위해 희생하는 정당이 국민의 대표로 선택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경실련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정당, 후보자, 유권자, 언론에게 다음과 같이 호소한다.

1. 정당에 대한 호소

- 박근혜 대통령은 선거 개입 행위를 중단하라.
- 각 정당은 최대한 빨리 공천을 마무리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거에 임하라.
- 각 정당은 기득권이 아닌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책을 내놓고 국민의 판단을 구하라.

2. 유권자에 대한 호소

- 유권자는 포퓰리즘, 장밋빛 공약에 더 이상 현혹되지 말고, 꼼꼼하게 후보와 정책을 검증해야 한다.
- 유권자는 지역감정, 정당바람에 휩쓸리지 말고 진정한 국민의 대표를 뽑아야 한다.
- 유권자는 나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

3. 후보자에 대한 호소

- 후보자는 민생경제 회복과 국가발전을 위한 정책선거로 경쟁하라.
- 후보자는 책임질 수 있는 공약을 제시하라.
- 후보자는 깨끗하고 공정하게 선거에 임하라.

4. 언론에 대한 호소

- 언론은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검증하는데 필요한 정책 자료를 제공하라.
- 언론은 과열·혼탁선거와 소모적인 정쟁을 증폭시키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2016년 3월 16일

경실련 20대 국회의원 선거 유권자운동본부

경실련이 제안하는
20대 총선 정책과제

1. 경제 양극화 및 불평등 해소

- 1)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재벌개혁
 - ① 지주회사 규제 정상화
 - ② 집중투표제 및 전자투표제 의무화
 - ③ 징벌적 손해배상제 및 집단소송제 도입
 - ④ 금산분리 강화
- 2) 조세체계 개선을 통한 조세정의 실현
 - ① 소득세 최고 과세표준 신설 및 최고세율 인상
 - ② 법인세 정상화
 - ③ 가업상속 공제제도 폐지
- 3)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 ① 비정규직 차별개선
 - ② 적정수준의 최저임금 보장
 - ③ 차별적 처우의 금지와 범위확대 적용

2. 민생 회복과 복지 강화

- 1) 거주기간 보장을 통한 서민주거안정
 - ①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 인상률상한제 도입
- 2) 출산율 제고를 위한 공보육 정상화
 - ① 국공립보육시설 30% 확충
- 3) 노령사회 대비 노후소득 보장 강화
 - 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개선을 통한 노후소득 최저생계비 보장

- 4) 능력에 맞는 건강보험료 부담
 - ① 건강보험 부과체계 소득중심 일원화
- 5) 희망과 미래를 위한 청년문제 해결
 - ①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를 통한 청년 일자리 확대
 - ② 청년수당 도입 및 고용보험강화를 통한 청년 복지제도 강화
 - ③ 조건 없는 진짜 반값등록금 실현

3. 국민중심, 신뢰회복을 위한 정치개혁

- 1)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국회제도 개혁
 - ① 국회의원 윤리위원회 강화
 - ② 연중 상시국회 운영 및 상시국정감사 도입
- 2) 비례성 강화와 지역주의 완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 ① 독일식 정당명부제 도입
- 3) 국민의 기본권 강화를 위한 국정원 개혁
 - ① 테러방지법 악법조항 수정
 - ② 국회의 민주적 통제 강화

4.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통한 분권 강화

- 1) 재정권한 지방이양을 통한 재정분권 실현
 - ① 지방소비세 확대
 - ② 국세와 지방세 비율 6:4로 조정

5.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실현

- 1) 외교역량 강화와 남북 상호의존 확대
 - ① 개성공단 재개 및 인도적 지원 확대
 - ② 압박·제재 외교를 넘어선 평화외교역량 강화

I. 경제 양극화 및 불평등 해소

1.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재벌개혁

- ① 지주회사 규제 정상화(2단계 출자구조 및 자회사 지분보유 정상화, 부채비율 100%, 자회사 이하 지분보유 100%)
 -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출자 단계를 기본적으로 지주회사-자회사의 2단계로 제한하고,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을 상장회사는 최소 30%, 비상장회사는 40% 보유토록 해야 함. 또한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을 현행 200%에서 100%로 정상화시키고, 자회사까지 지주회사화 되는 2중 지주회사를 방지하기 위해 자회사 이하에서는 100% 지분의 손자회사만 가지도록 하는 규제를 도입해야 함.
- ② 집중투표 및 전자투표제 의무화
 - 현행 상법에서는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는 의무화가 아닌 정관을 통한 선택사항임. 대주주에게 우호적인 이사회를 견제하고, 소액주주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집중투표 및 전자투표제를 의무화 하도록 상법을 개정해야 함.
- ③ 징벌적 손해배상제 및 집단소송제 도입
 -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현 하도급관련 일부만 도입하고 있음. 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근절하고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손해배상액을 최대 3배로 적용하는 징벌적 성격의 손해배상제를 공정거래법 위반 전체로 확대 도입을 해야 함. 아울러 담합 및 소비자피해액이 큰 중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집단소송제 도입을 통해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해 줄 수 있도록 해야함.
- ④ 금산분리 강화
 - 첫째,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것을 예외로 인정하는 금산법 부칙은 개정을 통해 삭제해야 함. 일을 통해 삼성생명이 과도한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특혜를 해소시켜야 함. 둘째, 공정거래법 제11조(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의 예외조항을 삭제하여, 예외 없이 금융보험 계열사가 소유한 주식지분의 의결권 행사를 전면금지 시켜야 함.

2. 조세형평성 제고를 통한 소득재분배

① 소득세 최고 과세표준 신설 및 최고세율 인상

- 고소득자 비율 증가와 소득양극화 현실을 반영한 3억원 초과 구간(2014년 기준 종합소득자의 0.83%) 신설하여 최고세율 42% 부과해야함. 또한 구간별 세율차이 9%p 일원화하는 정비가 필요함. 일원화를 위해 8,800만원~1억 5000만원 이하 33%로 인하해야함.

② 법인세 정상화

- 200억원 초과~5000억원 이하는 25%로 정상화하고 5000억 초과기업 군은 27% 세율 적용하는 최고 구간을 신설 해야함. 고용과 투자확대를 위해 법인세를 인하 하였으나 그에 대한 효과가 미흡함으로 인하 이전으로 원상복귀 해야함. 또한 담세능력이 있는 초대기업에 대해서도 과세를 강화해야함. 소득세율과의 절대 세율차이로 인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세율 조정이 필요함.

③ 가업상속 공제제도 폐지

- 가업상속공제는 도입 시기 보다 급격히 적용대상과 공제액 한도가 확대되어 현재는 매출액 3000억 까지 기업이 적용 대상이며, 의원 입법 발의안에는 매출 5000억 원까지의 기업도 공제대상으로 하는 내용으로 중견기업까지 포함되었음. 또한 부동산 임대업 등 가업과 무관한 업종들이 포함되어 있어 가업승계와 전혀 상관없는 제도임. 결과적으로 기업소유자의 지분 승계에 대한 세금부담을 완화 해주는 것은 오히려 일가의 감세혜택이므로 소득최상위계층에 대한 감세이므로 폐지되어야 함.

3.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① 비정규직 차별 개선

- 기간제 근로자는 일시적인 업무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하게 하고 상시적이고 계속적인 업무에는 그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해야 함. 사용(이익)과 고용(책임)의 분리로 인해 중간착취가 본질적으로 내재된 간접고용형태의 근로자파견과 사내하청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거나, 이를 허용하여도 동일한 가치노동에는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업무수행을 위한 동일한 노동과 근로조건을 보장해야 함.
- 정규직 고용에 우선권과 직접고용 확대를 위해 사업주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채용

하는 경우 업무 또는 자격 등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거나 일정 비율을 고용하도록 해야 함. 또한 파견법 제6조의2(고용의무)에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용사업주에게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를 규정한 것과 유사한 취지에서, 원청기업이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 하청기업에 소속된 근로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거나 일정 비율을 직접고용 하도록 하는 법과 제도를 도입해야 함.

② 적정수준의 최저임금 보장

- 현재 국민의 약 6분의 1인 16.5%가 빈곤선 아래인 연간 1천 68만 원 이하 가처분 소득으로 살고 있음. 더 큰 문제는 많은 시간 일을 하면서도 빈곤을 탈출하지 못하는 이른바 근로빈곤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임. 적정한 최저임금보장은 현 상황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음. 먼저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생계비를 책정한 후, 이에 근접하는 최저임금의 수준을 정해야 함. 이로서 빈곤한 삶을 살고 있는 이들에게 지금보다 훨씬 안정된 삶의 수준을 보장할 수 있음.

③ 차별적 처우의 금지와 범위 확대 적용

- 불법파견, 사내하청 근로자에 대해 기간제법과 파견법상 차별적 처우의 금지와 그 시정절차의 적용가능성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들에게 원청기업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와 비교하여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시정을 구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해야 함. 차별적 처우의 금지는 외견상 비정규직 근로자 개인의 문제로 보이지만, 해당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 근로자들의 집단적인 문제라는 성격도 있으므로 이들이 가입한 노동조합에게도 신청권을 인정해야 함.

II. 민생회복과 복지 강화

1. 거주기간 보장을 통한 서민주거안정

①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인상률상한제 도입

- 세입자가 임대료를 지급하고, 쫓겨나야 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한곳에서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는 필수적인 제도임.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년의 계약기간 보장 외에 재계약할 권리나 계약갱신 시 임차보증금 상환을 두지 않아 전월세 폭등에 따른 주거비 부담을 세입자가 다 떠안았음.

- 이에 미국,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인상률상한제'를 도입해야 함.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차임 3개월 연체 ▲거짓·부정 임차 ▲임차주택 전대(轉貸) ▲임차주택 멸실(滅失) ▲임차주택 철거·재건축 등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최초 임대차 계약 후 2회의 자동계약갱신을 인정해 최소 6년의 거주기간 보장을 의무화해야 함. 또한 급격한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 또는 주택 임대료 증액 후 2년 내에는 증액청구를 못하도록 하고, 증액청구는 보증금 또는 차임의 5%의 범위 내에서만 인상할 수 있도록 상환을 정하도록 해야 함

2. 출산률 제고를 위한 공보육 정상화

① 국공립 보육시설 30% 확충

- 영유아 보육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국공립 보육시설의 비중을 획기적으로 늘림. 2020년까지 현재 시설 수 비중의 3배에 해당하는 15%, 현재 보육시설 이용자의 약 10%인 국공립시설 이용자 비중을 30%까지 향상시킴. 출산률 제고 정책은 국민연금의 재정안정성에도 기여할 수 있으므로 기금의 복지투자 적극 모색.

3. 노령사회 대비 노후소득 보장 강화

① 노후소득 최저생계비 보장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개선

- 현세대 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공적연금을 강화함. 최대 20만원(정액 10만원 + 국민연금 연계 10만원 차등)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노인의 소득자산(국민연금 등)에 따라 추가 20만원을 지급하여 최대 40만원(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수준)을 보장하는 체계 구축.
- 고소득층의 낮은 국민연금 기여를 높이기 위해 현행 421만원인 부과대상 소득상한액을 2배로 인상하고, 급여 상한액(최고연금)을 설정함. 저소득층의 낮은 보장률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최저연금제도를 도입해 공적 부조와의 역진성을 개선하고 공적연금의 소득재분배 및 합리성 강화

4. 능력에 맞는 건강보험료 부담

① 건강보험 부과체계 소득중심 일원화

- 직장가입자들의 보험료 부과 기준소득을 임금소득 외에 임대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 종합소득 개념으로 확대하고, 보험료 납부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의 보험료 면제를 폐지하여 능력에 따른 부과원칙을 실현함.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보험료를 부과했던 지역 가입자의 불합리한 보험료 산정방식을 개선함.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소득범위가 확대 되면 건강보험 재정을 확보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소득이 없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춰 부과체계의 불평등 문제를 개선함.

5. 희망과 미래를 위한 청년문제 해결

①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를 통한 청년 일자리 확대

- 청년일자리 문제는 단순한 청년문제나 일자리 문제가 아니므로 경제·사회 전반적인 구조개혁을 통해 해결해야 함. 장기적인 경제전략을 수립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벌어진 간극을 좁혀나감으로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해 나가야 하며, 임금과 고용안정성이 보장되는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해야 함. 현재 정부의 정책은 청년층 일자리와 장년층 일자리를 경쟁적 관계로 대립시켜 기존 일자리의 노동환경을 악화시켜 청년일자리 늘리는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음. OECD 회원 국가들도 청년일 자리를 늘리기 위해 조기퇴직을 활성화하였다가 실효성 없이 사회적 부담만 가중되자 이를 철회한 경험을 가지고 있음.

② 청년수당 도입 및 고용보험강화를 통한 청년 복지제도 강화

- 사회 양극화의 심화에 따라 많은 청년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음. 이들은 당장의 경제사정으로 인해 충분한 진로 모색도 하지 못하고 열악한 근무환경을 감수하며 취업에 임하고 있음. 학자금 대출로 시작되는 부채는 취업이후에도 청년들의 삶이 나아지지 못하도록 옥죄고 있음. 이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자리 찾기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청년수당을 지급하거나 고용보험의 혜택을 강화해야 함. 현재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표면적으로는 지급기간을 늘리고 지급액을 인상한 것처럼 보이지만 수급요건을 강화하고, 하한액을 인하하며, 조기재취업 수당을 폐지하고 있음.

③ 조건 없는 진짜 반값등록금 실현

- 단계적으로 고지서상의 실질 등록금이 인하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함. 더불어 소득 분위산정 방식에 있어서도 자영업자들의 축소신고 등의 개선 등 현행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는 산정방식이 필요함.

Ⅲ. 국민중심 신뢰회복을 위한 정치개혁

1.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국회제도 개혁

① 국회의원 윤리위원회 강화

- 국회의원 윤리심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윤리특위 산하에 외부전문가로 구성되는 ‘윤리조사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의정활동에서 무책임한 폭로성 발언을 하거나 비도덕적이고 국회의 권위를 실추하는 행위들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윤리심사의 실효성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국회 윤리위원회의 위상 강화가 필요함. 이를 위해 윤리특위 산하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윤리조사위원회’를 설치, 조사권을 부여해 윤리특위에 회부되는 윤리심사 요구안에 대해 실질적으로 사전 조사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함.

② 연중 상시 국회 운영 및 상시 국정감사 도입 :

- 8월 임시회 개최를 명시화하고, 임시회가 열리지 않는 매 홀수월에는 반드시 10일 이상 상임위를 열도록 함. 이를 통해 연중 기본 245일 이상 국회가 운영되도록 함.
- 국회 일정의 예측성 향상과 법안 검토 내실화를 위해 의사일정 요일제와 같은 회의 정례화 제도를 도입해 상임위 및 본회의 일정을 정례화할 필요가 있음. 이를 바탕으로 연초에 캘린더식으로 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을 확정하고 그에 따라 국회가 운영되도록 함.
- 각 상임위원회는 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을 고려해 ‘연간 상임위 운영 기본일정’을 정하도록 함. 상임위별로 겹치지 않게 국감일정을 조정해 확정하도록 함.
- 매 홀수월에 상임위별로 국정감사를 개최하도록 하고, 국정감사 일정을 연간 상임위 운영 기본 일정에 포함해 결정하도록 함.

2. 비례성 강화와 지역주의 완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①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

- 향후 선거제도는 비례성을 강화하여 유권자의 지지율을 의석으로 그대로 반영하고, 지역주의를 완화할 수 있는 방향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혁해야 함. 이를 위해 비례성을 강화하고 지역주의를 완화할 수 있는 선거제도로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함.
- 아울러 비례대표 의석 확대가 반드시 필요함. 더불어 지역대표성에 의한 후보 등록을 명시화하여 직능·계층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노동, 사회적 약자·소수자, 여성 등 직능·계층의 대표성에 의한 추천을 의무화해야 함. 각 정당의 권역별 비례대표 명부 작성 시 정당의 대의기관에서 반드시 순위투표를 통해 결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상향식 공천 절차를 규정하여 밀실 공천의 폐해를 방지하도록 해야 함. 의원정수 확대의 경우 구체적 재원 마련·특권 폐지 방안이 선제되어야 함.

3. 국민의 기본권 강화를 위한 국정원 개혁

① 테러방지법의 악법조항 수정

- 테러방지법의 테러의 개념 자체가 모호하고 악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법 시행 조건부터 국민들의 납득할 선으로 개선해야함. 또한, 테러방지법의 통제장치로 인권보호관을 두지만, 인권보호관의 자격, 임기 등 운영에 관한 전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테러방지법 시행에 있어 국회가 인권보호관을 직접 추천하는 등 민주주의 원리가 적용될 수 있게 되어야함.

② 국회의 민주적 통제 강화

- 국정원에 대한 외부 감시 및 견제 시스템이 필요함. 국정원의 예산은 '국가기밀'이라는 이유로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결산에 이르기까지 각종 특례로 싸여 있음. 특례 폐지가 우선적으로 선행되어, 체계적인 예산감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국회의 정보위의 예산 통제권과 감사권은 실질적인 방안임.
- 또한 정권의 변화와 관계없이 지속될 수 있는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개혁안이 필요함. 여권과 야권 모두 국정원의 중립성 확보와 대북 및 대외 정보수집 능력 강화를 주장한 만큼 국민을 위한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고, 국가안보를 위한 국정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민주적 원칙에 따른 통제 강화에 적극 나서야 함.

IV.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통한 분권 강화

1. 재정권한 지방이양을 통한 재정분권 실현

① 지방소비세 확대

- 2010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한 지방소비세를 인상해야 함. 우선 2009년 정부가 약속한 5%p(약 2조원)를 우선 확대해 지방소비세를 현행 11%에서 16%로 올리고, 장기적으로 20%까지 확대해야 함.

②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 6:4까지 조정

- 현재 국세와 지방세는 총 조세수입에서 8:2의 비중을 가짐. 그마저도 국세의 세목은 소득과 세인 소득세와 법인세 등으로 구성된 반면, 지방세의 경우 재산세, 취득세 등 재산과세 비중이 지나치게 높음. 재산과세의 비중이 높으면 세수의 안정성은 확보되지만 세수의 소득과 소비 탄력성은 상대적으로 낮음. 만약 부동산 경기의 침체가 유지된다면 지방세수 감소로 이어지게 되고, 지방재정은 더욱 어려워지게 됨.
- 늘어가는 지방 재정의 부담을 중앙정부가 교부세나 국고보조금 등으로 충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세제 개편을 통해 지방세의 조세 가격 기능을 복원하고 이를 통해 지방 재정의 자립도를 높여나가야 함.

- 대북인도적 지원, 이산가족 상봉, 보건의료협력 등 인도적 조치를 통해 신뢰구축과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야 할 것임. 이를 통해 북한의 합리적 사고 전환과 '비핵화 공동선언' 이행을 촉구해 나가야 할 것임.

② 압박·제재 외교를 넘어선 평화외교역량 강화

- 정부는 대북 압박을 강화하고, 한미중, 한미일 등 3각 협력 체제를 활성화하여 북한의 행동변화를 유도한다고 하지만, 압박과 제재 일변도로는 한계가 있음.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나서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북한을 변화시키고 설득해 나가는 평화적 방법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됨.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로서 책임있는 역할에 적극 나서고, 북한이 대화의 장에 나올 수 있도록 6자회담 틀 속에서 평화외교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임. ☺☺☺

V.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실현

1. 외교역량 강화와 남북 상호의존 확대

① 개성공단 재개와 인도적 조치 확대

- 개성공단은 북한에 시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소기업의 활로를 모색하고 북한으로 하여금 시장경제체제의 경험을 학습하게 하는 장임. 개성공단 전면 폐쇄가 북한에게 일순간 경제난을 불러올 수는 있으나 북핵문제 해결의 실효성 있는 조치는 아님. 개성공단 폐쇄 장기화는 우리기업에 많은 피해를 가져오고, 향후 정상화를 위해서도 막대한 시간과 노력을 유발할 것임. 한반도 불안정성 극복을 위해서도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노력에 즉각 나서야 할 것임.

양극화 · 불평등 해소를 위한 '5대 부문 15대 경제구조개혁 과제'

양극화 · 불평등 해소를 위한 5대 부문 15대 경제구조개혁과제

1.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재벌개혁

- 1) 황제경영 및 총수일가 사익편취 방지
- 2) 재벌의 소유 · 지배구조 개선
- 3) 불공정행위 근절과 소비자권의 보호를 위한 법의 지배 실현

2. 노동시장 양극화와 불평등 개선

- 4) 비정규직 차별개선 및 고용안정
- 5) 균형 잡힌 노사관계 확립
- 6) 여성 · 고령 · 이주노동자 보호

3.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 시장 및 건설산업 구조개혁

- 7) 세입자의 주거안정
- 8) 부동산 거품 및 불로소득 제거
- 9) 기형적인 건설산업 구조개혁

4. 소득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위한 복지개혁

- 10) 출산을 제고 위한 보육/교육 부담 완화
- 11) 노령사회 대비 노후소득 최저기준 보장

- 12) 의료 영리화에 따른 불평등 해소

5. 농업 및 농가 양극화 개선

- 13) FTA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특별법 제정
- 14) 농업 · 농촌 관련 직접 직불제 개편 및 확대
- 15) 공공급식의 친환경 로컬푸드 사용 의무화

I. 5대 부문 15대 경제구조개혁과제

1.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재벌개혁

○ 재벌개혁은 총수일가의 황제경영과 불법 · 편법적 세습을 봉쇄함으로써 총수일가의 사적 이익이 사회적 이익과 정합성을 갖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임. 이를 위한 구체적 정책은 황제경영 및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를 막을 수 있는 방안,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의 개선을 통한 세습과 경제력 집중을 막을 수 있는 방안, 불공정행위 근절 및 특혜사업 방지 등으로 구성 됨.

- 1) 황제경영 및 총수일가 사익편취 방지

① 감사위원 분리 선출

○ 견제 받지 않는 황제경영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로 상법개정을 통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여) 감사위원 분리 선출

② 집중투표제 및 전자투표제 도입 의무화

○ 특히 집중투표제의 경우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었으며, 법무부 주도로 법안이 만들어졌으나 결국 사장된 대표적인 경제민주화 공약 위반 사례임. 대주주에게 우호적인 이사회를 견제하고, 소액주주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집중투표 및 전자투표제를 의무화 하도록 상법을 개정해야 함.

③ 자사주 매각 및 계열사간 인수합병, 계열사간 거래의 경우 선출된 감사위원 과반수 동의

- 자사주 매각과 계열사간 인수합병을 통해 총수일가가 사익을 편취하고, 소액주주의 피해를 입히고, 세습을 통해 항제경영을 하는 것에 대한 사전 방지가 필요함. 주지하듯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기업합병에서 이 문제가 극명하게 드러난 바 있음. 상법개정을 통해 위 사안의 경우 감사위원 과반수가 동의하는 조건을 추가해야 함. 감사위원 분리 선출 되도록 상법개정을 한 후, 계열사 간 내부거래는 분리 선출된 감사위원들의 과반수 의결을 통해서만 허용하도록 해야 함.

④ 성실공익법인 제도 폐지를 통한 편법 승계 차단

- 2007년에 개정된 상증세법 제48조는 '성실공익법인'의 경우 주식자산에 대한 증여세를 10%까지 면제해주고 있음. 성실공익법인으로 지정되는 요건은 어렵지 않음. 이러한 성실공익법인제도는 재벌 총수일가들의 편법 승계에 악용될 소지가 큼. 따라서 상증세법 개정을 통해 성실공익법인제도는 폐지시켜야함.

⑤ 총수일가 직간접 지분율 차이가 일정범위 초과할 경우 처분명령 및 환수

- 상법개정이 이뤄지지 않거나, 상법개정과는 별도로 공정거래법을 재개정하는 방안임. 공정거래법 재개정을 통해, 총수일가의 직간접 지분율(현금청구권) 차이가 일정범위(예를 들어, 5%)를 초과하는 계열사 간의 내부거래에 대해 수혜기업의 총수일가 지분을 처분하도록 명령하고 내부거래에 의한 자본이득은 세금으로 환수토록 함. 즉 지원기업의 총수일가 직간접 지분이 20%이고 수혜기업의 총수일가 직간접 지분이 30%일 때 수혜기업의 총수일가 지분 5%를 매각하도록 명령함.

2) 재벌의 소유지배구조 개선

① 지주회사 규제 정상화 및 개선

- 지주회사체제를 기업집단 단위로 지정
 - 현재 공정거래법은 특정 기업이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지주회사로 지정하고 있음. 일단 특정 기업이 지주회사로 지정되면 일정 기간(통상 1~2년 이내) 내 지주회사의 출자를 받고 있는 회사들은 자회사, 손자회사 또는 증손회사의 규제를 받게 됨. 따라서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기업집단 단위로 지주회사를 지정함으로써 특정 재벌이 지주회사체제에 소속된 계열사와 지주회사체제 밖에 존재하는 계열사를 동시에 보유할 수 없도록 해야 함.

○ 출자단계를 2단계로 제한(지주회사-자회사) 및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 정상화

-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지주회사제도가 처음 도입되었을 당시처럼, 출자 단계를 기본적으로 지주회사-자회사의 2단계로 제한하고 또 지주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상장회사의 경우 최소 30%, 비상장회사의 경우 40% 보유하도록 규제를 정상화해야 함. 이 경우에도 자회사가 100% 지분의 손자회사를 보유할 수는 있음. 물론 손자회사도 100% 지분의 증손회사를 보유할 수 있음. 즉, 100% 출자는 출자 단계의 규제에서 제외됨.

② 금산분리 강화

- 금융계열사와 일반계열사, 금융지주회사와 일반지주회사의 완전 분리
 - 동일인이 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집단과 비금융회사 또는 비금융회사집단을 동시에 지배하는 것을 금지시켜야 함. 주요 금융회사, 주요 금융회사집단, 주요 비금융회사, 주요 비금융회사집단에 대한 정의는 경제규모를 고려해 정의하도록 함. 금산분리의 원칙은 지주회사체제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기업과 기업집단에 동일하게 적용함.

○ 금융 보험계열사의 의결권 행사 전면 금지

- 공정거래법 제11조(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의 예외조항을 삭제하여, 예외없이 금융보험 계열사가 소유한 주식지분의 의결권 행사를 전면금지시켜야 함.

○ 계열분리명령제 도입

- 금융계열사와 일반 계열사를 원천적으로 분리시킬 수 있는 계열분리 명령제를 입법화해야 함. 동일 재벌 내에서 지원성 금융거래나 불공정한 금융거래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그 폐해가 크다고 판단될 때는 소유관계에서 계열을 분리하도록 명령해야 함.

③ 세계적 규범에 맞는 기업집단 출자구조의 정립

- 지주회사체제 규제를 따르거나, 지주회사체제가 아닌 경우 법인의 자회사는 100% 출자한 회사로만 설립을 허용
 -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지주회사체제가 아닌 기업집단은 규모에 따라 일정 기간 내에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거나 100% 출자체제로 전환하도록 해야 함. 이 일정 기간 이후에는, 분할·분할합병에 따른 회사 분리와 자회사의 지주회사 자기주식에 대한 주식 배정을 금지하도록 상법을 개정토록 해야 함. 재벌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마지막 단계의 입법이 완료되는 시점에 상법개정으로 도입할 감사위원의 분리 선출 및 분리 선출된 감사 위원 과반수 동

경제정책

2016년 3월 4일

의 사항과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공정거래법 규제는 일몰하도록 함으로써 중복 또는 과잉 규제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음.

3) 불공정행위 근절과 소비자권의 보호를 위한 법의 지배 실현

①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기준 상향(관련 매출액 대비 최대 20%)

○ 현재 공정거래법 상 과징금 최고 부과기준은 담합에 적용된 관련매출 대비 10% 이지만 실제로 부과되는 최종 부과액은 관련매출액의 5% 미만 수준임. 따라서 과징금 부과기준을 20% 이상으로 상향시킴과 동시에 소비자피해액을 의무적으로 산정하도록 하여 발표해야 할 것임

② 징벌적 배상제 및 집단소송제 도입

○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현 하도급관련 일부만 도입하고 있음. 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근절하고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손해배상액을 최대 3배로 적용하는 징벌적 성격의 손해배상제를 공정거래법 위반 전체로 확대 도입을 해야 함. 아울러 담합 및 소비자피해액이 큰 중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집단소송제 도입을 통해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해 줄 수 있도록 해야함.

③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의 입법화

○ 주식회사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특경가법의 처벌 기준이 낮은 상태에서 대법원의 양형기준만으로는 이를 보완할 수 없음이 최근 일련의 판결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음. 따라서 대법원 양형기준을 입법화해서 판사의 임의적 형량 적용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④ 시내 면세점 사업 선정방식 가격경쟁방식(경매방식)으로 개선

○ 관세법 개정을 통해 특허수수료 가격경쟁(경매방식) 방식으로 개선해야 함. 가격경쟁 방식이 사업권의 가치를 보다 정확히 드러내고, 특혜적 요소를 제거하는 효율적 방식임. 선정시 대기업군과 중소기업군을 나눠서 각각 경매방식으로 전환하고, 시장점유율이 높은 기업이 참여할 경우 사전에 자격을 검토하면 될 것임.

2. 노동시장 양극화 및 불평등 개선

1) 비정규직 차별개선 및 고용안정

① 낮은 근로조건이면 고용안정, 고용불안이면 정당한 근로조건 보장

○ 기간제 노동자는 일시적인 업무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하게 하고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는 그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해야 함. 사용과 고용이 분리되어 중간착취가 본질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노동자파견과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거나, 이를 허용하여도 동일한 가치노동에는 동일한 노동과 근로조건을 보장해야 함.

② 정규직 고용에 대한 우선권 부여 및 직접고용 확대

○ 사업주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를 채용하는 경우 업무 또는 자격 등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기간제 노동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거나 일정 비율을 고용하도록 하는 법과 제도를 도입해야 함. 또한 파견법 제6조의 2(고용의무)에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용 사업주에게 파견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를 규정한 것과 유사한 취지에서, 원청기업이 노동자를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 하청기업에 소속된 노동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거나 일정 비율을 직접고용 하도록 하고, 이들의 기존의 근무에 대해 정당한 인정해주어야 함.

③ 차별적 처우의 금지와 범위 확대 적용

○ 현행 기간제법과 파견법에 따르면 불법파견,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금지와 그 시정절차의 적용가능성이 명확하지 않음. 그러므로 원청기업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와 비교하여 이들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시정을 구할 수 있도록 절차를 도입해야 함. 차별적 처우는 외견상 비정규직 노동자 개인이 당하는 문제로 보이지만, 해당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 노동자들도 마찬가지로 해당하는 집단적인 문제의 성격이 있으므로 이들이 가입한 노동조합에게도 신청권을 인정해야 함.

④ 노사관계상 비정규직의 참여와 절차의 보장

○ 현행법에서는 파견노동자 또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속한 노동조합이 사용사업주나 원청기업과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와 단체교섭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며, 파견·하청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는 경우 원청기업의 사업장 또는 시설

을 부분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또한 근참법상 노사협의회에는 근기법상의 노동자를 전제로 하여 파견법상 파견노동자 또는 하청노동자는 제외하는데, 이들이 원청기업의 노사협의회에 독자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해줘야 함.

⑤ 비정규직에 대한 산업재해의 예방책 마련

- 산업안전보건법은 유해작업 도급금지, 도급 사업 시 안전·보건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 기간제 노동자 및 하청기업 노동자가 이러한 업무에 종사할 시 원청기업에 대한 보건·안전부문 관리감독과 산업재해 예방의무를 강화해야 함.

⑥ 적정수준의 최저임금 보장

- 적정수준의 최저임금 보장을 위해 최저임금 결정 시 전체 노동자의 임금수준에 대비한 최저임금의 비중을 명시해야 함. 표준생계비를 책정하고 이에 근접도록 근로자의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의 지표에 따른 하한선을 명문화하는 것임. 보다 논란을 줄이기 위하여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50% 이상’으로 명문화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 있음.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지표를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상승률, 유사근로자의 임금인상률, 소득분배 조정분 등을 고려하여 법으로 규정해야 함.

⑦ 노동자 보호를 위한 공정한 평가 기준 및 절차 마련

- 노동자의 업무능력을 평가하고, 저성과자에 대한 직무능력향상 프로그램을 통한 합리적인 인사제도를 실시하며, 적절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사용자의 권한이지만 자칫 이를 악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해칠 수 있음. 2013년 OECD 개별·집단해고 보호지수에서 우리나라는 34개 회원국 중 22위를 차지했으며, 10년 이상 장기근속자 비율은 OECD 회원국 중 칠레 한 나라만 우리보다 낮은 것으로 드러남. 이러한 고용현실을 감안할 때 상시적 구조조정으로부터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선 사용자들의 권한 남용을 막는 구체적인 평가기준 및 절차를 제도화해야 함.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가 마련된다면 노동자들이 느끼는 고용불안을 조금이라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임.

2) 균형 잡힌 노사관계 확립

① 노조활동 자율성의 보장 및 탄압중지

- 우리나라 노조 설립은 허가주의 원칙이 아니라 신고주의 원칙에 의거하여 노조의 설립과 가입을 자유롭게 함을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신고 반

려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 등 노조활동에 지나치게 개입하고 있음.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포함할지 여부는 노조 스스로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결정할 사항으로 이에 대한 개입은 노조탄압으로 볼 수밖에 없음. 따라서 향후 행정관청이 노조에 대한 지나친 개입을 막고 노조 활동의 자율성을 충분히 보장하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

② 노동자의 교섭권 강화 및 노사 자율적 풍토 조성

- 정부는 올해 초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행정지침을 발표함.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취업규칙을 변경하기 위해선 노동자 과반 이상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데, 정부의 행정지침으로 인하여 노동자에게 아무리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도 경영자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는 이유만 대면 저지하기 어렵게 됨. 이로서 노사관계상 힘의 불균형이 심화되면 사회 양극화도 더욱 심해질 것으로 우려됨. 비노조·비정규직도 어려움 없이 단체교섭에 임할 수 있도록 참여권한과 절차를 보장하여야 하며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는 사업장에서는 정부개입 없이 노사자율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야 함.

③ 사회적 약자층의 노조활동 보장

- 노사정의 힘의 균형을 복원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사회적 약자들의 자유로운 노조 결성 및 대표단체 결성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함. 비정규직·여성·장애우·노인 등 사회적 약자층도 자유롭게 노조 등 대표단체를 결성하여 의사를 표출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고, 이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함.

3) 여성·고령·이주노동자 보호

① 특수고용·비공식 고용을 포함하는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보호

- 고용이 전반적으로 불안정화되는 추세 속에서 가장 먼저 그 피해를 받는 것은 여성노동자들임. 하지만 노동자 일반의 비정규직 이슈 속에 묻혀서 여성노동자들의 문제는 거의 부각되지 못함. 시간제 확대 등의 시도는 여성 억압적 자본주의와 가부장제에 의한 것으로 여성고용의 비정규직화를 촉진하고 있다는 점이 사회적으로 인식되어야 함. 이런 맥락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동시에 시간제 확산을 저지해야하며 더 나아가 여성 특수고용노동자들이나 비공식노동자들의 보호를 위한 법제도 확립이 필요함.

경제정책

2016년 3월 4일

② 남녀 차별철폐 및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구현

○ 자본이 노동자들을 저임금으로 유지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가 노동자들을 나누어 차별하는 것인데 그 대표적인 형태가 남녀차별임.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은 임금에 국한되지 않고 채용·훈련·승진 등 다양하게 존재함. 남녀고용평등에 대한 법률의 존재에도 직종분리·직군분리 등 방법으로 실질적 성차별을 하는 사업주에게 이를 적용하기란 매우 어려움. 따라서 남녀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구현하여 직무가 다르더라도 동일한 가치의 직무에는 동일한 임금을 받도록 해야 함.

③ 가사·돌봄 노동자 노동권보장 및 처우개선

○ 어린이집 교사들에 대한 이슈에서 나타나듯 돌봄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대한 관심보다는 돌봄의 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훨씬 높은 실정임. 어린이집 돌봄의 질과 관련된 이슈가 등장하고 어린이집 CCTV 설치 등이 제안되었지만 돌봄 노동자들의 인권 및 노동권에 대한 문제제기는 뒷전으로 밀려남. 부분적으로 가사노동에 대한 근로계약서 작성, 돌봄 노동자 권리 향상 움직임 등이 시도되고 있지만 이들의 처우는 여전히 열악한 상황임. 가사노동과 돌봄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 인식 전환과 함께 처우개선이 필요함.

④ 정년연장 및 폐지

○ 2016년부터 60세 정년제가 시행되었으나 실제로 정년연장의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은 제한적임. 고령화와 정년 연장은 정(+의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고령화가 진전 될수록 정년연장 논의는 활발해질 수밖에 없음. 현재 연금수급은 국민연금 수급연령 규정에 맞추어 69년 출생자를 기준으로 65세부터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2016년부터 정년이 60세로 연장되었지만 연금수급연령을 감안할 때 퇴직연령과의 격차를 더 줄여야할 필요가 있음. 점차로 정년을 연장시키되 장기적으로 정년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⑤ 고령자 적합직무 개발 및 보상체계 마련

○ 고령인력에 대한 적극적 활용은 소비의 대상인 고령자들에게 생산자로서 역할을 부여하며, 국가의 복지부담을 줄이고, 세금 납부를 하게 하는 등 경제적 효익을 야기할 수 있음. 기업이 고령인력을 유지·활용하기 위한 인프라가 마련되어야 하며, 고령인력이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 적합직무의 개발 및 적정 보상체계의 마련을 통해서 좋은 일자리에서 고령인력이 일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야 함.

⑥ 고용허가제의 노동허가제 전환

○ 고용허가제는 고용자를 중심으로 외국인 인력을 활용하는 제도로서 각종 제약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이 사실상의 강제노동을 하도록 만들 수 있음. 고용허가제를 이주노동자들에게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허용하는 노동허가제로 전환해야 함. 갑작스런 제도변화는 노동현장의 반발과 혼란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점진적인 제도도입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⑦ 차별적 제도의 철폐 및 불법체류 노동자 보호방안 마련

○ 이주노동자도 노동조합 결성이 가능하도록 허용되었지만 불법체류 이주노동자에 대한 임금 체불, 폭력, 산업재해 등이 발생했을 때 노조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33조, 외국인의 지위를 보장한 헌법 제6조, 국적에 따른 근로조건 차별대우를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5조, 인종차별금지를 금지한 노조법 제9조 등과 ILO협약 이주근로자협약 제6조 제1항 등에 따라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함. 또한 불법체류 이주노동자에게 임금 체불, 폭력, 산업재해 등에 대한 제도적 보호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3.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 시장 및 건설산업 구조개혁

1) 세입자의 주거안정

①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 세입자가 임대료를 지급하고, 정당한 계약갱신 거부 사유가 없는 한 계속 같은 집에서 살기 원한다면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함. 이는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과 권리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제도임. 임대인이 법에서 정한 사유가 없는 한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계약조건 변경이나 갱신거절 통지를 아니 한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갱신되고, 계약갱신은 최초 임대차 계약 후 2회까지, 최소 6년간 임대차기간 보장을 의무화해야 함

② 전월세인상률 상한제 도입

○ 전세 또는 월세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 또는 주택 임대료 증액 후 2년 내에는 증액청구를 못하도록 함. 또한 증액청구는 보증금 또는 차임의 5%의 범위 내에서만 인상할 수 있도록 상한을 정하도록 함.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7조에 증액청구 한도 비율(5%)을 추가하고, 계약 또는 증액 후 2년 내에는 다시 하지 못한다는 조항을 신설해야 함

③ 주거급여 확대

○ 현재 중위소득 43%(4인가구 기준 188만 8,317원) 이하로 돼 있는 수급권자의 범위 및 임차료의 지급 금액을 확대해, 수급권자는 차상위계층(4인가구 기준 210만 7,889원)까지, 주거급여도 월 평균 20만원 수준으로 높여 주거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야 함

④ 공공임대주택 확대

○ 장기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20%(375만호)까지 늘리고, 공급방식도 공공임대주택의 건설비용, 건설기간, 택지 확보 등의 어려움을 고려해 기존주택을 활용한 다양한 공공임대주택 방식으로 확대해야 함. 박근혜 정부가 주거안정 정책으로 추진하는 뉴스테이는 건설사 특혜와 중산층을 위한 주거방안으로 실제 서민주거안정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있음. 행복주택의 경우도 대학생·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초소형 임대주택이라는 특성상 여러 계층의 무주택 서민들을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없으므로 정부 정책을 전면 전환해야 함

2) 부동산 거품 및 불로소득 제거

① 임대소득과세 정상화

○ 지난 2014년 2월 26일 임대차 시장 선진화대책에서 2주택 이상자 또는 2,000만원 이상자에게는 종합소득과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였음. 그러나 불과 10일 만인 3월 5일 임대사업자의 세 부담 증가에 따른 임대시장 불안이 우려된다는 임대소득과세 시행을 2년간 유예하기로 발표함. 또한 6월 13일 3개월 후에는 유예기간을 1년 연장해 2017년부터 과세하기로 발표하고, 애초 3주택 이상 보유자와 9억 원 이상 고가 주택 소유자에게 부여하는 종합과세를 분리과세로 변경함. 이에 서민주거안정과 조세형평성을 위해 애초의 발표대로 부동산임대소득을 사업소득에 포함시켜 종합과세함으로써 임대소득 과세를 강화해야 함

② 후분양제 도입

○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전체공정의 80% 이상 진행 한 후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후분양제를 의무화해야 함. 후분양제는 건설사 부도 및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 예방, 분양권 전매시장 원천적 차단, 건설비용 절감과 적정 분양가 책정, 주택품질을 높이는 장점이 있음

③ 주거복지처 신설

○ 현재의 국토부의 업무 중 서민주거안정, 주거복지 분야를 주택건설 업무와 분리해 주거안정을 책임질 독립적인 기구의 설치가 필요함. 대통령 직속 '주거복지처'를 신설해 주거복지정책의 수립·추진 등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을 책임지도록 함. 주거복지처는 주거기본법에 근거한 주거정책 수립과 추진, 공공임대주택공급 및 관리, 주거환경 개선, 주거비부담 완화 등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를 포함한 주거안정을 위한 역할을 담당하도록 함.

3) 기형적인 건설산업 구조개혁

① 직접시공제 도입

○ 직접시공제는 입찰브로커 감소, 품질 향상, 공기 준수의 긍정적 효과가 있음. 또한 품질향상 및 안전사고 감소 등의 중대한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원도급업체에 대한 하도급을 제한함으로써 인하여 고질적인 하도급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효과를 수반하게 됨. 이를 위해 세금으로 진행되며 책임감리 대상 사업으로 관리가 용이한 100억원 이상 공공건설공사를 대상으로 50% 이상 직접시공을 의무화해야 하함. 또한 건설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공정임금제를 도입해야 함.

② 민자사업 경쟁 및 투명성 강화

○ 민간자본 활용이라는 도입취지에 맞게 재정지원은 중단되어야 함. 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용지비의 범위 내에서만 지원할 수 있고, 보조금 지급현황은 국회 승인받아야 함. 또한 단독 수의계약제도를 폐지하고 경쟁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해야 함. 나아가 민자사업자의 책임 강화와 도덕적 해이를 없애기 위해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 완전 폐지해야 함.

③ 표준품셈 폐지 및 시장단가제 확대

○ 최근 성남시는 예산낭비를 중요하는 행정자치부의 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표준품셈 적용 거부를 선언함. 시의 자료에 따르면, 거푸집/보통마감의 경우 표준품셈이 표준시장단가에 비해 15%비싼 것으로 나타남. 표준시장단가 역시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시장가격과는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실제 가격 차이는 더욱 클 것으로 추정됨. 이에 예산낭비의 주요 원인인 표준품셈을 폐지하고 시장단가(하도급단가) 적용을 확대해야 함. 또한 시장단가를 산출할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적산센터 설립이 필요함.

4. 소득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위한 복지개혁

1) 출산률 제고 위한 보육/교육 부담 완화

① 국공립 보육시설 30% 확충

- 무상보육 실시 이후 영유아 보육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보육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공립 보육시설의 비중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함.
- 2020년까지 현재 시설 수 비중의 3배에 해당하는 15%, 현재 보육시설 이용자의 약 10%인 국공립시설 이용자 비중을 30%까지 향상시켜야 함.
- 출산률 제고 정책은 국민연금의 재정안정성에도 기여할 수 있으므로 기금의 복지투자 확대

② 고교 입시 및 대학 입시제도 개선

- 특목고는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하도록 관리감독 강화
-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및 평가 실시하고 제대로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일반고로 강제 전환
- 고교입시 전형을 동시에 진행해 입학생 선발과정을 공정한 형태로 정상화함. 대학입시에서 논술 등 특기자 전형 폐지, 수시 전형에 대한 정비방안 마련.

2) 노령사회 대비 노후소득 최저기준 보장

① 노후소득 최저생계비 보장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개선

- 현세대 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해소를 위해 공적연금을 강화함. 최대 20만원(정액 10만원 + 국민연금 연계 10만원 차등)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에 노인의 소득자산(국민연금 등)에 따라 추가 20만원을 지급하여 최대 40만원을 보장하는 체계 구축
- 고소득층의 낮은 국민연금 기여를 높이기 위해 현행 421만원인 부과대상 소득상한액을 2배로 인상하고, 급여 상한액(최고연금)을 설정함. 저소득층의 낮은 보장률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최저연금제도를 도입해 공적 부조와의 역진성을 개선하고 공적연금의 소득재분배 및 합리성 강화

3) 의료 영리화에 따른 불평등 해소

① 능력에 맞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소득중심 일원화

- 직장가입자들의 보험료 부과 기준소득을 임금소득 외에 임대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 종합소득 개념으로 확대하고, 보험료 납부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의 보험료 면제를 폐지하여 능력에 따른 부과원칙을 실현함.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보험료를 부과했던 지역 가입자의 불합리한 보험료 산정방식을 개선함.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소득범위가 확대 되면 건강보험 재정을 확보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소득이 없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춰 부과체계의 불평등 문제를 개선함.

② 의료이용의 접근성 제고위한 전달체계 개편 주치의제 도입

- 주치의 제도란 국민마다 자신의 주치의가 있어서 건강문제가 발생했을 때 쉽게 해결하면서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합리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임.
- 주치의제 도입을 통해 대형병원으로 불필요하게 집중되고 있는 자원을 지역의 1차 의료에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예방과 건강증진 등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의료의 중복과 낭용을 방지해 의료비 지출을 절감함.

③ 공공의료 공백해소위한 인력 양성 국공립 의대 신설

- 국가방역체계 운영 및 취약지 의료인력 확보 등 지역 간 공공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인력 및 시설 확충. 특히 의료불균형의 핵심인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공공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별도 양성체계 마련.
- 의과대학이 없는 광역시도에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의대 및 병원 설립. 기존 국공립대학 중심으로 국가장학생으로 선발하여 졸업 후 일정 기간동안 공공의료기관에 근무

5. 농업 및 농가 양극화 개선

1) FTA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특별법 제정

- FTA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10년간 조성 운영되며, 무역이득공유제 대안으로 합의된 만큼 지원 마련 방안·기금의 예산 및 결산 보고 의무화 등을 법률로 제정하여 정부에 따라 기금 목적과 방안이 변동되는 것을 방지하고 장기적 계획으로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함. 또한, 재원의 마련은 수익자 부담 원칙을 법제화하여 FTA 가입으로 피해분에 대해 지속적인 지원방안 근거 마련해야 함.

2) 농업·농촌 관련 직접 직불제 개편 및 확대

- 농업·농촌이 생산하는 공공재 및 다원적 기능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직접 직불제를 개편해야함. 농업·환경·농촌의 영역으로 직접 직불제를 개편 확대해야 함. 농업영역의 경우 식량자급률 제고와 후계인력 육성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영농활동의 지속성에 대한 보상으로 식량자급 직불제, ▲신규농업인에 대한 영농정착을 지원하는 청년농민 직불제를 신설해야 함. 환경영역의 경우 농업생태 및 농촌경관 보전 유지를 목표로 지급해야함. ▲환경친화적 농업활동에 대한 보상으로의 농업생태 직불제, ▲농촌의 자연·문화 등의 보전에 대한 농촌경관 직불제를 도입해야 함. 농촌영역에 대한 직불제는 농촌의 삶의 질 향상과 국토·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개편되어야 함. ▲농촌공동체에 필요한 시설 및 기반 관리를 위한 직불제, ▲농촌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직불제가 도입되어야 함.

3) 공공급식의 친환경 로컬푸드 사용 의무화

- 안정적 수요처 확보와 지역경제 순환을 위해서 공공급식(군부대, 공공기관, 학교 등)의 친환경 로컬푸드 의무화가 필요함. 공공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가 지역 내에서 생산-유통-소비가 된다면 역내 순환을 증가시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효과를 낳게 되고, 안정적 수요처 확보를 통해 농가 소득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할 수 있음. 또한 공공급식의 친환경 로컬푸드 식재료 가격은 국비로 부담하여, 사업의 안정을 꾀하여야 함. ☺☺

20대 국회의원 선거 걸림돌 후보자

■ 경제민주화 및 불평등 해소 걸림돌 후보자

1. 최경환(새누리당, 경북 경산)
2. 나성린(새누리당, 부산 진구갑)

■ 서민주거안정 걸림돌 후보자

3. 이노근 의원(새누리당, 서울 노원갑)

■ 국민통합 걸림돌 후보자

4. 김진태(새누리당, 강원도 춘천시)
5. 김태흠(새누리당, 충남보령시서천군)
6. 조원진(새누리당, 대구 달서병)

■ 도덕성·자질 걸림돌 후보자

7. 윤상현(무소속, 인천 남구을)
8. 김석기(새누리당, 경북 경주)
9. 조전혁(새누리당, 인천 남동을)
10. 이은재(새누리당, 서울 강남병)

■ 경제민주화 및 불평등 해소 걸림돌 후보자

1. 최경환(새누리당, 경북 경산)

: '초이노믹스'로 인한 가계부채·국가부채 증가, 경제양극화 심화, 친재벌 정책 추진 등

1) 친재벌 정책 추진

① 재벌기업 및 주식부자를 위한 세제정책

- 기획재정부 장관 및 경제부총리로 있으면서 배당소득 증대세제, 근로소득 증대세제를 도입함. 배당소득증대세제는 종합소득 2천만원이상 배당소득 고소득자에게 9천억원 이상의 감세혜택을 가져오는 주식부자들의 감세정책임.
-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당해 연도 평균임금이 최근 3년 평균 상승률 이상 증가한 모든 기업에 대해 3년 평균 상승률 초과분의 10%(대기업은 5%)를 세액공제해주는 제도임. 이는 소득이 많을수록 평균소비성향이 낮아 중소기업 근로자보다 대기업 근로자에게 유리함. 대기업은 지급 능력이 있고, 대응교섭력이나 동일업종 비교임금 압력이 크기 때문에 임금인상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는데, 세제 지원이 있으면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여력이 큼.
- 우리나라 국민총소득의 법인소득 비중은 늘고 있으나, 가계소득 비중은 감소하고 있어, 법인부문이 가계보단 실질적으로 담세능력이 큼. 그럼에도 법인세는 전 정부에서 인하되어, 재벌기업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음. 이에 사회적으로 최고세율을 25% 수준으로 정상화하자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었으나, 최경환 의원은 장관 당시 인상에 대한 반대를 강하게 주장함.
- 아울러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원샷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인수합병시 주주총회 등의 절차를 간소화시킴으로써 편법 승계에 악용된다는 지적이 많은 친재벌법안이었음. 그럼에도 최 의원은 장관시절 원샷법이 통과되어야 경제가 활성화 된다는 명목으로 강하게 밀어부친 결과 통과됨.

② 민자사업 활성화를 통한 재벌건설사 특혜

- 최경환 장관은 혈세낭비와 재정부담으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 폐지한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를 손익공유형(BTO-a), 위험분담형(BTO-rs)이란 이름으로 재도입했음. 이에 경실련은 2015년 11월 19일 중앙지방검찰청에 업무상 배임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였음.

③ 대한항공을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한 학교앞 호텔건립 추진시도

- 2014 8월 26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 입법촉구 호소문'을 발표하며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학교주변 호텔 건립을 허용해 줄 것을 재차 요구함. 이는 당시 송현동 부지에 호텔을 건립하고자 하는 대한항공을 위한 법이었음. 나라의 미래인 학생들의 학습 환경과 역사·문화적 가치를 파괴하면서까지 경제활성화 하겠다는 경제부총리의 인식은 천박하다고 볼 수 있음.

2) 서민경제 악화

① 가계부채 급증(빚내서 집사라 정책에 따른 결과)

- 2014년 6월 부총리로 내정되자마자 밝힌 "한여름에 겨울옷을 입고 있는 격"이라는 발언으로 단번에 금융권의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완화를 이끌어냄. 즉 2014년 주택시장 활성화 위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지역 구분 없이 70%, 총부채상환비율(DTI)은 60%로 완화함. 아울러 부동산 금융규제(LTV·DTI)완화는 2015년 7월31일부로 일몰예정이었으나 존속기간을 연장 연장함. LTV, DTI 완화 등 가계부채 관리 부실로 인해 현재 1200조원이 넘어가는 가계부채 급증을 불러 왔음. 이는 금융정책을 부동산 경기 활성화 수단으로 악용했기 때문임.
- 가계부채는 2015년 3분기 기준으로 1,166조원에 이르렀고, 이 중 주택담보대출은 480조원이거나 되었음.

〈표〉 가계부채 및 주택담보대출 (단위 : 십억원)

구분	2014년 2/4분기	2014년 3/4분기	2014년 4/4분기	2015년 1/4분기	2015년 2/4분기	2015년 3/4분기
가계부채	1,035,889.5	1,056,441.5	1,085,259.2	1,098,305.0	1,131,535.5	1,166,037.4
주택담보대출액	432,038.7	445,163.6	460,603.3	469,871.7	466,851.4	480,072.5

출처 : 한국은행

② 담뱃세 인상 등 서민증세

- 국민건강증진을 명분으로 대다수 서민들에게 부과되는 담뱃값을 4500원으로 인상했음. 담뱃값 인상에 포함된 개별소비세는 보석, 귀금속제품, 고급가구 등 주로 사치품으로 인정되는 품목에 부과하는 국세로 이를 통해 매년 1조 7천억원 가량 확보할 수 있어 명백한 세수 확보를 위한 담뱃값 인상임을 알 수 있음. 즉 배당소득증대세제 같이 부자들에게는 감세를 담뱃값 인상과 같이 서민관련해서는 증세를 하였음.

③ 청년 실업의 증가

〈표〉 청년 고용율 및 실업률

구분(단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
청년층 인구(천명)	9,512	9,550	9,507	9,499
실업률(%)	8.0	7.4	8.7	9.3
고용률(%)	41.1	40.1	40.5	41.7

출처 : 통계청

- 2015년 청년 실업률은 9.3%를 기록하며 IMF금융위기 이후 최고에 달함. 청년 고용률은 실업률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청년인구가 감소추세인 것을 감안하면 실제 고용률은 지표상 나타나는 수치보다 낮음.
- 이러한 청년실업에 대한 대책으로 당시 최경환 경제팀은 '청년고용증대세제'를 내놓았음. 이에 대해 국회 예산정책처는 '취업취약계층 일자리사업 평가' 보고서를 통해 "청년고용증대세제는 신규 고용을 창출하기보다 사업주가 이미 계획했던 신규채용인원에 대한 인건비 절감 효과만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혀, 최경환 경제팀의 정책이 잘 못 설계되었음을 지적함.

3) 국가채무증가 등 재정악화

① 국가채무의 증가

구분(단위)	2012년	2013년	2014년
국가채무액(조원)	443.1	489.8	533.2
GDP대비 국가채무비율(%)	32.2	34.3	35.9

출처 : 국가통계포털, 기획재정부

- 최 의원은 장관시절 가계부채 관련 실패와 더불어 국가부채 관리 또한 실패하여, 2014년에는 국가채무가 533조원에 이르렀음. 국회예산정책처는 2015년 말 기준으로 595조1천억원인 국가채무가 올해 말 644조9천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② 국가재정관리

구분(단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통합재정수지	18.5	11.8	13.5	-7.0
관리재정수지	-17.4	-23.4	-25.5	-46.5

단위 : 조원

자료 : 기획재정부, 2014년까지는 결산기준, 2015년은 추경예산 기준

- 국가 재정관리에 있어서도 2015년 추경예산기준 (-)46.5조원의 적자를 기록했음. 이는 메르스 사태 예산 때문이었다고 하나, 2014년 까지도 적자폭이 계속 커짐을 볼 때, 재정건전성이 좋다고 할 수 없음.

4) 자원외교 실패 관련 책임회피

- 자원외교 부실투자로 인해 자원 공기업들이 심각한 재정문제가 발생했음에도 진상규명을 회피.

최 전 부총리는 2014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신이 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 투자권과 관련해 "법률적·형식적으로는 지휘라인에 있었으나, 내용적·실질적으로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하는 등 책임 회피성 발언.

5) 법치주의 무력화 발언 등 자질 문제

① 중대범죄 대기업 총수 사면시사 발언 : 경실련 검찰고발(직권남용, 직무유기)

- 2014년 9월 25일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업인들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은 경제살리기에 도움이 안된다는 입장을 피력했음. 최경환 전 장관은 또한 경제살리기에 도움이 될 경우 기업인을 가석방 및 사면할 수 있다는 황교안 장관의 발언에도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발언을 함.

② 선거개입발언 : 2015년 8월 28일, 새누리당 의원연찬회에서 "경제정책으로 총선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선거 개입 발언으로 물의를 빚음.

③ 전관예우 발언

: 최 의원은 지난 3월 26일 이상일(경기 용인정)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여, "제가 비록 경제부총리는 그만두었지만 그래도 전관예우라고, 친한 공무원이 수두룩하다"며 "이번에 이상일 후보를 꼭 좀 당선시켜 주시고 이우현(경기 용인갑) 후보도 세트로 당선시켜 주시면 제가 전관예우를 발휘해 용인에 확실한 예산을 보내주겠다"고 말했음. 이는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 이력을 활용해 국가 예산을 멋대로 하겠다는 발언이나 마침가지임. 이는 박 대통령이 전관예우를 '공직사회의 암덩어리', '오랜 적 폐'라고 척경을 지시했던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임.

2. 나성린(새누리당, 부산 진구갑)

: 친재벌 정책 주도

1) 친재벌적 법률 개정 시도

① 상속세 완화를 통한 부의대물림 추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을 통해 가업상속공제 요건완화, 매출액 상한기준 5천억 원으로

확대, 기업상속공제율 100%로 확대를 추진함.

②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폐지 시도

- 법인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해 주택 및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폐지에 나섬.

③ 재벌 특혜적 선정방식 개선 없는 기간연장 법안 발의

- 보세판매장(면세점) 특허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관세법 일부개정안에 나섬. 면세점 사업은 현재 터무니없이 낮은 특허수수료(매출 대비 0.05%)로 인해 그간 호텔롯데와 호텔신라의 경우 연간 수조원의 매출을 올리는 반면, 수수료는 몇 억원도 채 안되었음. 시내면세점 사업은 롯데 호텔과 호텔신라 등 재벌 특혜적 사업이라는 점이 2015년 공론화되었음. 그럼에도 선정방식에 대한 개선 없이 관세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특허기간만 연장하려는 것은 재벌 특혜를 연장한다는 의미.

2) 친재벌 발언

- 2014년 8월 12일 최경환노믹스에 대해 "일부 정책들은 단기적으로 부자나 재벌에게도 혜택이 갈 수 있겠지만, 부자나 재벌이 열심히 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민소득을 늘리고, 세수를 확대하고, 복지지출을 늘리면 모든 국민, 특히 서민의 생활이 나아지는 것"이라고 '낙수효과'를 강조함. 재벌에게 혜택 가지만 서민을 위한 것이라는 기만적인 발언을 함.

3) 재벌기업 활력 제고 강력 추진

- 2014년 8월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규제완화와 서비스산업 활성화는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모든 국민, 궁극적으로 서민을 위한 정책들"이라고 하며, 기업활력제고 특별법 등에 대해 강력 추진을 했음. 원샷법으로 불리는 기업활력제고법은 삼성 특혜법이라고 불릴 정도로 소규모 인수합병시 총회 등 절차를 간소화 시키는 것으로 재벌 승계에 악용될 우려가 크다는 점이 계속 지적되었었음.

4) 국정감사 장외발언 논란

- 2019년 9월 15일 나 의원은 이날 오전 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야당 의원을 겨냥해 "피감기관 장에게 질문을 하고 답변할 기회를 안 주고 욕박지르고, 인격 모독적이고 인격 살인적인 공격을 반복하고 있다"며 "아프리카 국가도 아니고, 너무 창피해서 같이 앉아있기 힘들다"고 말해 물의를 빚음.

5) 서민주거안정특위 활동 불성실

- 나성린 의원은 2015년 11차례 진행된 서민주거복지특위 출석을 단 2차례만 하여, 가장 낮은 출석률을 보여, 서민주거안정에 대한 노력이 없음을 보여줌.

■ 서민주거안정 걸림돌 후보자

3. 이노근(새누리당, 서울 노원갑)

* 서민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부정

- 이노근 후보는 전세 값 폭등과 급격한 월세전환으로 주거비 부담이 커져 살 집을 찾아 힘들게 살아가는 '전세난민'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시장원리에 반한다며 강하게 부정함.
- 주택은 산업이다. 그래서 경쟁을 붙여서 자꾸 투자해서 거기에 짓게 해야 된다, 그래서 120%, 130% 갈 때 이것은 더 이상, 주택복지의 개념은 순수하게 관리적인 측면으로 가고, 공급 부족이니 이런 것은 해소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서민주거복지특위 2차 회의)
- "우선으로 시장원리가 작동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주택 공급이 넓게 돼서 가격도 싸지고 임대료도 싸지고 월세도 싸지고 그러는 것이지, 그것을 자꾸 정부에 맡긴다면 정부 실패를 초래하는 겁니다."(2015.2.24. 서민주거복지특위 3차회의)
- 짓는 방법이 초점을 맞춰 짓고 공급하는 것이 초점에 맞춰져야지, 시장에서 가격을 통제해 가지고 이게 어떤 부작용 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여기서 집중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2015.4.8. 서민주거복지특위 5차 회의)
- 기본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생각을 해야지 당사자 간의 계약자유 원칙에 의해서 있는 것을 국가가 개입해 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요금을…… 자유롭게 공급을 많이 해야지……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2015.6.9. 서민주거복지특위 7차 회의)
- 경제문제는 정치적으로 풀어서는 안 된다. 부동산정책은 시장 자율에 맡기고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어야 한다.(2015.11.19. 뉴스핌 인터뷰)

* 세입자의 주거안정 제도도입 반대

- 이노근 후보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활동과 각종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일관되게 주거문제는 개인의 문제기 때문에 시장논리에 따라 주택정책은 시장자율에 맡겨야 하며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 등 세입자의 안정적 거주를 보장하는 제도도입을 반대함

- “저는 개인적으로 만일 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이 생길 경우에 소위 종전에 얘기하던 것과는 다른 부작용, 다시 말해서 이게 근본적인 문제는 주거안정인데 상한제 하는 경우에 여기에 무슨 시장이 생기느냐 하면 블랙마켓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전세의 경우에 3%, 5% 이렇게 딱 상한을 정해 놓으면 웃돈 더 주는 놈한테, 나라도 당장 웃돈 더 주는 놈한테 호감이 있지. 그럴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원래 시장원리에 의해 작동하는 것을 법으로 이렇게 묶어 놓는 경우에 상당한 부작용이 생기고 결국 웃돈 주는, 그래도 조금 더 잘 사는 사람한테 주거가 더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공공 부문에서 자꾸 주거를 많이 공급하는 것이 더 현명한 것이 아닌가, 블랙마켓 생기면 이것 감당 못 합니다.”(2015.9.3. 서민주거복지특위 연장1차 회의)
- 기본적으로 경제 시스템 속에서 얘기를 해야지 이것을 주택만 가지고 대중적 요법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어떻게 하자, 임대료상한제를 어떻게 하자, 이거야말로 아픈 데 그냥 마취주사 한 대 놔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2015.12.29. 서민주거복지특위 연장 5차 회의)
- 이렇게 제한을 하기 시작하면, 주택을 짓는 투자자들이 투자 수입 다시 말해서 임대료 수입이 감퇴한다는 나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신규를 민간시장에서 주택을 짓지 않으려고 하죠. / 공급을 늘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공급을 늘리는 데 있어서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일 5%로 제한해 놓으면 당장 민간시장에서 위축이 되기 때문에 공급이 안 될 거 아닙니까? (2015.9.24.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중)

* 부동산 불로소득 확대 및 기업특혜 입법활동

- 이노근 후보의 19대 국회 입법 활동은 건설사와 지주, 건물주, 집주인에게 이익을 많이 줘 이윤을 극대화시켜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임. 이를 위해 각종 규제를 풀어 불로소득을 키우려 함. 그 결과 개발에 따른 이익은 고스란히 기업이나 집 부자, 땅 부자에게 돌아가고, 반면 세입자 등 서민들은 거리에 쫓겨나 주거불안이 심화됐음.
- 불로소득을 키우고 기업에게 특혜를 제공하기 위한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등 10개의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함.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부동산3법 중 하나인 재건축 조합원 주택수 규제완화 입법을 비롯해 용적율 상향과 층·고도 완화, 정비구역 지정 기준연한 축소, 주택거래신고 폐지, 기부채납 및 개발이익 완화나 면제 등 오히려 서민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다수의 입법을 발의함
- “주택거래신고제, 이것은 사실상 저는 실효성도 없는 괜히 거추장스러운 제도라고 생각합니다.”(2014.12.22. 제3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 정부의 확정부채가 지금도 LH만 한 430조 되는데. 그렇다면 이것도 역시 민간시장을 활성화해서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각종 시장기능을 위축시키는 복지 개념만 도입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3차 회의)

- “재건축 과잉규제로 인한 재건축시장의 장기 침체, 주택 공급난, 노후 공동주택의 슬럼화, 자원 배분의 비효율, 재산권 및 거주권의 침해, 부동산시장의 침체 등 역기능 등이 복잡한 양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와 인천, 경기도, 그리고 일부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준공 후 최장 40년간 재건축을 묶어 놓은 상태로 이는 지역별 형평성에도 위반되고, 사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합법성 여부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2012.9.18.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
- 지금 일선은 생각지도 않고 이윤에 비하면 과도하게 환수해요. 이것은 뻥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안전장치를, 왜냐하면 어차피 뉴스테이가 잘 추진되게 하려면 과도하게 기부채납, 공공이라는 명분으로 해서…… 그거 안전장치 해 놓아야 돼, 그거에 대한 제지장치를....(2015.6.17. 제33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법안심사소위)
- “내가 여기서 의문시하는 것은 이것 허가조건을 붙이면서 기부채납하라고 그럴 것 아니에요, 이게 공공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사업성이 또 떨어지는 거야.” “하여튼 ‘환경’자만 나오면 완전히 알레르기에 걸려 가지고 나라 사업, 국제 사업 같은 것이 그냥 좌초되고 이러는 것은, 좀 더 대승적인 차원에서 가야 돼요.”(2015.12.2. 제337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국토법안심사소위)

* 막말논란 및 자질문제 제기

- 이노근 후보는 지난 2014년 12월 15일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야당의 원들이) 조그만 단서를 갖고 탐정소설 쓰듯 작가적 상상력을 발휘해 단정하고, 확대하고, 왜곡·발전시킨다.”며 “요새 정치인들 버릇부터 고쳐야 한다.”며 막말논란을 일으킴.
- 지난 2015년 4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뉴스테이 정책에 대한 검토의견 발표가 끝나자, “전문위원이 주택문제 도시계획문제 기본적인 인식 부족하다”며 “수석전문위원 거취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여당의 정책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피력한 수석전문위원의 전문성을 폄하하고 압력을 행사하는 발언을 함.
- 지난 2015년 11월 16일 새누리당 초·재선 모임 ‘아침소리’에 참석해 2015년 11·14 민중총궐기 집회에 대해, “이번 사태가 발생해 검찰이 관련자를 기소나 불기소 재판에 회부하면 문제가 좌파 검사 자칭 진보 검사, 판사 역시 진보 판사라든지 좌파 판사들이 무혐의·불기소·무죄 판결을 내놓은 게 상당히 목격됐다”고 발언했음.

* 복면금지법 대표발의

- 복면금지법 대표 발의 : 2015년 11·14 민중총궐기 집회 참가자들을, “차량, 사다리, 각목, 쇠파이프, 밧줄까지 준비해서 과격한 난동을 부린 것을 보면 소위 말하는 유사범죄단체로 보인다”

(2015.11.16, 새누리당 초·재선 모임 ‘아침소리’ 참석) 집회시위 참가자를 폭력행위 여부와 무관하게, 복면이나 마스크를 착용해 얼굴을 가리는 행위만으로도 처벌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2015.11.26.).

* 4대강 후속사업 주장

- “일부 가장자리에 녹조가 발견된 것을 일부 언론에서 마치 강 전체에 녹조가 발생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2013.10.14. 국토교통부 국감)
- “지금이라도 4대강 주변뿐이 아니라 여러 강 주변에 수로라든지 또는 지천이라든지 이것을 해야 된다”(2015.6.25. 국민안전혁신특별위원회)

■ 국민통합 걸림돌 후보자

4. 김진태(새누리당, 강원도 춘천시)

* 국정원 댓글 사건 옹호

- “원세훈 증인과 관련해서는 지난 대선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려고 나름 노력했었다는 점을 본 위원은 인정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지와도 전혀 무관하게 어떻게 운명처럼 이런 늪에 끌려 들어와서 오늘날 지금 이런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게 곧 개인적인 불행이면 그나마 다행이겠는데 이 틈을 타서 우리 국가정보기관의 힘을 어떻게 뺏어 보려는, 무력화시키려는 이런 종북 세력의 기도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2013.08.16. 국정원 댓글의혹 사건 국정조사특위 8차 회의)
- 국정원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국정원이 ‘공문서 위조’와 관련해 사과문을 발표했음에도 “이 문서들이 다 지금 협조자의 말에 따르더라도 다 위조됐다고 할 순 없다”며, “위조가 안 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위조든 조작이든, “국정원이 지금 그렇게 개입했다고 보지 않는다”며 국정원 개입 여부는 완전히 부정하고 옹호함.(2014년 3월 12일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한 사건이 국회에서 주요 쟁점 사안으로 거론되던 2013년 4월 25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대정부 질문은 생략한 채 국무총리를 향해 “종북 세력의 실체를 철저히 밝혀달라”며 “국회 본회의장 안에도 대한민국의 적이 있지 않나 묻고 싶다”는 말을 해서 논란을 불러일으킴. 국회 안에 종북 세력이 있다는 식의 발언으로 여당과 야당 의원 사이에 고성과 막말이 오감.

- 2013년 5월 10일에는 자신의 공식사이트와 트위터 등에 전교조에 가입한 교사를 '종북 세력'으로 매도하는 내용의 글을 올려 문제가 됨. 김 후보자는 춘천의 한 초등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학생들에게 “북한과 미국이 전쟁을 하면 누굴 응원해야죠?”라고 물었고, 아이들이 “당연히 미국이요”라고 답하자, “담임선생이 전교조는 아닌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라는 엉뚱한 글을 올림.
- 2013년 11월 3일 프랑스를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을 수행하던 중, 국정원 대선 개입 규탄 시위에 나서는 현지 교민과 유학생들을 향해, 페이스북에 “대가를 톡톡히 치르도록 하겠다”는 등의 협박성 글을 올려 국제적으로 망신을 삼.

* 세월호 수색작업 중단 및 인양반대 발언

- “저는 이 세월호 수색, 이제는 좀 종료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단하지는게 아닙니다. 하다가 그냥 그만두자는 게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할 만큼 했다. 할 만큼 했기 때문에 이제 정말 마무리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잠수사 두 분, 소방대원 다섯 분을 비롯해서 11명이 됩니다. 제가 집계를 해 보니까. 사체를 지금 인양하기 위해서 11명이 또 희생이 된 겁니다.”, “하루에 비용만 3억 5000만 원. 여태까지 마지막 사체를 건져낸 이후로, 처음부터 아니고 그 이후로 들어간 비용만 해도 300억 원을 이미 넘기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사람까지 다 찾겠다’ 이것은 정치적 슬로건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렇지만 현실적인 목표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2014년 10월 20일, 광주교섭 국정감사)
- “인양하기 위해서는 들어가서 크레인을 걸고 로프를 걸어야 하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잠수사들이 또 물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힘든 작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또 희생자가 생길 우려가 있다는 게 제일 걱정이고요.” “두 번째는 여기에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예산이. 해수부에서는 한 1,000억원 정도 든다고 하는데, 이게 한 3,000억원 정도로 눈덩이처럼 더 불어날 것이 예상입니다. 그러면 이 돈은 그냥 나오느냐, 내년도 예산에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아요. 어디서 무리하게 끌어다 써야 하는 문제가 있고요.” “처음에 사고 난 직후에도 ‘이거 빨리 들어 올려서 사람을 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접근을 했었지 이걸 들어 올리는 데 2년이 걸린다고 하면 특검이나 진상조사가 다 끝난 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의미가 반감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2014년 11월 13일, CBS '박재홍의 뉴스쇼' 인터뷰)

* 경찰 물대포 맞고 사경을 헤매는 백남기씨에 대한 '시위대 폭행설' 등 막말·조롱

- 2015년 11월 광화문 집회에서 농민 백남기씨가 부상을 입은 데 대해 “정황상 아주 상당히 수상한 점이 많다”며 물대포가 아닌, 시위대 폭행에 의한 부상 가능성을 제기함. YTN라디오 '신윤의 출

발새아침에 출연, 한 동영상은 언급하며 "어르신이 쓰러져 있는데 거기 어떤 시위대 중 한 명이 몸으로 덤쳐서 주먹으로 가격하는 듯한 장면이 있다"고 주장함.

* 국회 윤리위원회 최다 회부

- 김진태 후보자는 국회 윤리위원회에 4번이나 회부돼 19대 국회 여야를 통틀어 가장 많이 윤리위에 제소됨.
-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은 2014년 12월17일 김 의원이 야당의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제기에 대해 "또 거짓선동 시작이구나"라고 말해 사건의 본질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호도했다며 징계안을 제출.
- 김 후보자가 야당 의원에게 "왜 반말이냐? 나이도 어린 것이" 등의 인격 모독적 발언 등을 일삼아 2013년 한 해 동안 3차례나 징계안을 윤리위에 회부함.

5. 김태흠(새누리당, 충남보령시서천군)

* 국정원 댓글 사건 옹호

- 이 사건은 국정원 전·현직 직원이 민주당 당직자와 연계해서 국정원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계획 하에 이루어진 것이 그 발단의 핵심입니다."(2013년 7월 24일 국정원 댓글사건 국정조사)
- "민주당은 국정원이 댓글 활동으로 대선에 개입했다고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으나 저는 이 사건을 민주당이 국정원 전·현직 직원과 공모하여 국가기관인 국정원을 선거에 이용하려 했으나 실패한 정치공작,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타인의 인권마저 무참히 유린한 민주주의 파괴 사건이라고 규정합니다. 국정원의 댓글 활동은 인터넷 IT 기술의 발전에 따른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대남 공작을 차단하고 북한 및 중북 세력의 사이버 선전 선동에 대응하기 위한 본연의 임무입니다..... 검찰이 국정원 본연의 임무인 대북심리전 활동을 선거개입으로 기소한 것은 북한 및 중북 세력에 위협받는 대한민국의 안보 현실과 정보기관의 대북심리전 활동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2013년 8월 5일 국정원 댓글사건 국정조사)

* 세월호 유가족 '노숙자 비유'

- "국회에서 (유가족들이) 저렇게 있는 건 바람직스럽지 않다. 어디 뭐 노숙자들 있는 그런..."(2014년 8월 1일 :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이 의원총회 직후 단식 농성 중에 빨래를 널어놓은 유가족을 '노숙자'에 비유하면서)

* 청소노동자에 대한 권리침해 발언

- 2013년 11월 26일 비정규직인 국회 청소노동자의 정규직화 방안을 논의하는 국회 운영위 자리에서 김 후보자는 "노무관리 문제도 그렇고 이 사람들(국회 청소노동자들) 무기계약직 되면 노동 3권이 보장된다"면서 "특 하면 파업 들어가고 뭐하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려고..."라고 말함.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대놓고 짓밟음.

6. 조원진 (새누리당, 대구 달서병)

*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막말 / 세월호 참사에 대해 부적절한 비유

- 세월호 국정조사에서 여야가 해경 상황실 유선전화 녹취록 중 'VIP 관련 발언'에 대해 논란을 벌이며 회의가 지연되어 방청석에서 지켜보던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이 회의 진행을 촉구하자, 유가족들에게 "당신 뭘니까"라며 샷대질을 하고, "유가족이다"라고 밝혔지만 조 의원은 "유가족분들 좀 계세요. 지금 진실규명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하고 고성을 질러 소동이 벌어졌으며, 결국 속기록을 가져오라며 정회를 요구해 회의를 만나질 가랑 지연시킴. (2014년 7월 2일, 세월호 국정조사)
- 세월호 국정조사에서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의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는 주장을 펴기 위해, "AI가 터졌어요. AI가 터졌어. 대통령께서 AI 책임자한테 전화를 해요. '이 AI 확산되지 않도록 모든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을 다 동원해서 AI 막아라', 그러면 그 책임은 컨트롤타워가 대통령입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AI가 전국에 막 퍼지고 있는데 AI 퍼지지 않도록 모든 사람을 동원해서 막아라. 그리고 차단할 것 다 차단하고 해라',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그게 전부 대통령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다 해야 되네요? 그렇습니까?" 방청석의 일부 유족들은 "어떻게 닭과 비교하느냐" "희생자가 답이에요"라며 강력 반발. (2014년 7월 11일, 세월호 국정조사)
- 본인 해명 : "국가 재난의 여러 예를 들었는데 유가족분들 마음이 많이 상했다면 정말로 사과를 드린다"

* 세월호 특조위 독립성 침해

- 세월호 특조위가 대통령 행정 조사를 배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이석태 위원장을 비롯한 특조위 위원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특조위 예산 반영 금지를 요청하고, 특조위 기간 연장 논의를 포함해, 특조위 구성 및 기능과 관련한 세월호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주장. (2015년 11월 24일, 원내대책회의)

* 헌법적 가치 무시

-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로 있던 2016년 2월 4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진실하지 않은 사람'으로 찍힌 유승민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하면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자 "헌법보다는 인간관계가 먼저"라고 말함.
- 헌법은 민주주의 사회 구성원 모두가 지향하고 보존해야 할 가치를 집약한 행동과 사고의 최우선 준칙임. 최근 대통령 존영 논란 등에서 본바와 같이 자질과 능력, 비전과 정책은 제쳐놓고 박 대통령, 권력과의 '인간관계'만 중시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로서의 역할과 헌법적 가치를 무시하는 것임.

■ 도덕성 및 자질 걸림돌 후보자

7. 윤상현(무소속, 인천 남구을)

* 국민의 사법접근성 침해(민사소송법 일부개정안)

-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은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를 대법원 상고 사건부터 적용하되 상고를 제기한 사람이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으면 본안에 관한 소송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함.
- 법으로 변호사 선임을 강제하는 것은 국민의 사법 접근권에 대한 침해 일뿐 아니라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훼손함. 변호사 강제주의가 상고심에만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향후 하급심으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

* 막말 : 정당 민주주의 훼손

- "죽여버려, 김무성 그런 XX" 등 윤상현 의원이 새누리당 현재 공천 관련 막말 들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새누리당 공천과정에 대한 국민 불신을 초래함. (16.3. 언론보도)

* NLL 대화록 말 바꾸기

- 노무현 대통령이 NLL포기 발언을 했다는 공세를 주도하다가 2014년 5월 원내수석부대표를 그만두면서는 노무현 대통령은 한 번도 포기라는 말을 쓰지 않았다고 실토하여 말함.

8. 김석기(새누리당, 경북 경주)

* 용산참사 과잉진압

- 2009년 1월 폭력적인 강제진압 강행으로 5명의 철거민과 1명의 경찰이 생명을 잃은 용산참사의 책임자였음. 그러나 관련하여 용산 진압작전은 정당하다고 강변하는등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음.

* 학위논문 표절 의혹

- 2007년 낸 동국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에서 다른 연구자들의 논문을 통째로 베낀 이른바 '철판 표절'을 한 것으로 드러나 비판을 받음. 김 전 청장이 베낀 논문은 이종석씨의 2006년도 석사학위 논문인 '방법용 CCTV의 활용에 따른 기본권의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임. 김 후보자가 낸 논문 제목부터 '방법용 CCTV의 범죄예방효과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로 이씨의 논문 제목과 거의 유사함. 뿐만 아니라 안민권씨의 '방법용 CCTV의 효율적 운용방안에 관한 연구'라는 석사논문과 최용렬·김연수씨의 '방법용 CCTV의 범죄예방효과에 관한 연구'라는 학회 논문도 짜깁기한 함.

* 일왕 생일파티 참석해 논란

-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독도 영유권 문제 등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김 후보자가 공항공사 사장 시절 서울 한복판에서 열린 일왕 생일파티에 버젓이 참석해 논란이 됨. 2013년 12월 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주한일본대사관이 주최한 '천황 탄생일 축하 소연'에 모습을 드러내 빈축을 샀음. 더군다나 당시 일본의 유력 정치인들 사이에서 "독도는 내 지역구", "전쟁 상황에서 위안부가 필요했다" 등의 망언들이 쏟아져나와 대일 여론이 급격히 악화된 상황이었던 만큼 김 후보자의 행보에 대한 비판이 거셌음.

9. 조전혁(새누리당, 인천 남동을)

* 법원의 금지 결정을 무시하고 전교조 명단 공개

- 2010년 4월 당시 한나라당 의원으로 교육부로부터 입수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의 명단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개함. 2011년 7월 2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13부는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과 조 의원에게 명단을 제공받아 공개한 동아닷컴 측에 소송에 참여한 전교조 교사 3천 4백명에게 1인당 각각 10만원과 8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함. 법치와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대한 무지한 태도를 보임.

10. 이은재(새누리당, 서울 강남병)

* 법인카드 유용

- 19대 총선에서 재선에 실패한 뒤 2012년부터 한국행정연구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법인카드로 화
장품과 명품을 구매하는 등 유용한 사실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드러남.

* 용산참사에 대한 막말

- 비례대표 의원이었던 2009년에는 ‘용산참사’를 ‘용산 도심 테러’로 지칭하며 “법질서를 무시한 시
위대가 화를 자초한 것”이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음. ☹☹

20대 국회의원 선거
디딤돌 후보자

■ 경제민주화 및 양극화 해소 디딤돌 후보자

1. 민병두(더불어민주당, 동대문을)
2.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을)

■ 사회적 약자 배려 디딤돌 후보자

3. 심상정(정의당, 고양 덕양갑)
4. 은수미(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중원)

■ 정치적 소신·사회통합 디딤돌 후보자

5. 유승민(무소속, 대구 동구을)
6. 진 영(더불어민주당, 서울 용산)
7. 김성식(국민의당, 서울 관악갑)

■ 경제민주화 및 양극화 해소 디딤돌 후보자

1. 민병두(더불어민주당, 동대문을)

: 일감몰아주기 규정 강화, 소수주주권 보호 등 재벌개혁 노력

* 사업자의 부당지원행위, 일감몰아주기 등의 내부거래 제재 강화

- 현행법은 사업자의 부당지원행위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는 지원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의 입증
과 그것이 해당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였다는 점까지를 입증해야함. 이에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지원행위를 제3장(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집중의 억제)에도 규정하여 경쟁제한성에 대한 입증 없이도 부당하게 지원한 사실만으로도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는 부당지원 행위에 대한 제재함.

* 일감몰아주기 제재 강화

- 일감몰아주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강화해야 함. 이를 위해 이사·이사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또는 이사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도 회사의 사업기회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하고, 사업기회를 이용하는 것은 회사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하는 방법을 통해 사전적 요건을 강화하고, 회사와 이사 등 특수관계인과 회사 간의 거래에 대한 공시를 의무화 하는 법안을 발의 함.

-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발생한 이익에 대해 증여세 규정은 세후영업이익을 대상으로 하며, 정상거래비율로 간주한 비율(30%)의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변칙적인 부의 이전이 가능함. 이에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해서 발생한 매출 전체에 해당하는 세전 영업이익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정상거래를 초과할 경우 거래비율 전부에 대해서 과세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여 일감몰아주기 과세의 실효성을 높이고 일감몰아주기의 사후 제재함.

* 투명·책임 경영 확립을 위한 경영승계 및 사외이사 요건 강화

- 재벌의 승계과정에서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여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낭비되고 있음. 이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상장회사의 경우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와 관련된 내부규정을 사전에 마련하도록 하고,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법안을 발의함.

-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이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 중 1인이 사외이사가 되도록 하여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경영에 대한 감시를 할 수 있도록 함. 한편, 금융기관 또는 금융업과 관련이 있는 회사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전체 사외이사의 3분의 1 이상 두도록 하여 사외이사의 전문성을 확보를 통해 금융업의 투명하고 책임 경영을 강화하려고 하였음.

* 소수주주권 보호

- 사외이사선임, M&A 등의 회사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수주주 의견이 반영이 어려운 점이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산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상장회사의 경우 소수주주의 요청과 관계없이 전자투표제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하여 소수주주 보호를 위해 노력함.

* 기타 경제민주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 전개

- '남양유업 대리점 피해 대책 위원회'와 함께 남양유업의 밀어내기 보상 촉구.

- 농협금융 계열사의 일감몰아주기 관행 지적.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

- 소상공인연합회와 '상가권리금 상담센터'를 설치 추진.

- 중소기업의 해외 직접판매(해외 직판)용 쇼핑몰을 지원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중소 기업의 해외 직접판매 지원을 위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

- 다수 피해자가 발행한 금융분쟁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집단금융분쟁 조정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

- 임원보수 공개대상을 '5억 이상 미등기 임원'도 포함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갖춰야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등록을 허용하는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 이마트의 장안동 물류센터 건립 추진을 반대하는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해, 이마트측 담당자와 면담을 갖고 물류센터 건립 추진 중단 및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 이에 신세계 이마트는 물류터미널 건립을 중단하고 지역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계획을 결정.

-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개정안 발의.

2.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 을)

* 갑을관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

- 더불어민주당 내 갑의 횡포를 타파하기 위해 구성된 '을지로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남양유업방지법, 생활임금법, 건설불공정개선법, 상가권리금 약탈방지법 등 법안 55건의 법률을 공동 발의, 2015년 12월 현재 총 14건의 법률을 통과 시키는 등 갑을관계 개선을 위한 입법활동을 활발히 함. 특히 비정규직, 대리점주 등 분야에 상관없이 을(乙)을 입법활동을 펼침.

- 남양유업사태 해결, 본죽·배상면주가·매일유업·CU 편의점 등 본사와 대리점간 분쟁 타결 및 불공정행위 해결, 중소기업자 카드수수료 인하, 임대차 분쟁 조정, 대기업 기술편취 분쟁 해결, C&M 케이블방송·KT·LG U+·태광티브로드·삼성전자서비스 등의 간접고용비정규직 권리 보호 및 부당해고 복직 등 실질적 문제 해결 및 조정에서 직접적인 역할을 함.

* 공공부문 간접고용 근로자 보호

- 2015년 국감에서 중앙부처 산하 공공기관 비정규직 관리실태 분석결과 공공기관에서 용역 근로자를 상대로 시중노임 단가를 지급하는 곳은 6%뿐이라 밝혀냄. 다른 상임위 의원과 협력하여 전방위적인 국정감사 실시 결과 각 부처의 장관 및 공공기관장으로부터 시정과 정부 지침 준수를 통해 근로자 처우를 개선하고 보호하겠다는 확답을 받아내 시행을 앞두고 있음.
- 또한, 기존 국가와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공사, 용역 등) 시 작성하게 되어있는 청렴계약서에 “해당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적정한 임금 등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 약정하게 하고,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계약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함. 해당 간접고용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는데 노력함.

* 지역상권 상생발전

- 지자체가 상생품목을 고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상생품목에 대해 판매 제한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지자체에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을 발의함.

* 비정규직 노동자 사용제한

- 비정규직 노동자는 고용이 불안하며 임금 등 근로조건에 있어 차별대우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일단 비정규직으로 고용되면 정규직으로 전환되기가 매우 어려워 그 규모의 확산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거론되어 있음. 이에 비정규직노동자의 사용사유를 결원을 대체하거나 일정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등 특수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제한하는 개정안을 발의함. 기존 기간제법에는 사용자가 정규직을 채용할 시 해당 사업장이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하게 되어 있는데, 노력규정을 강제규정으로 강화하여 비정규직 남용을 방지하도록 함.

* 여성노동자 보호 강화

- 여성의 사회진출이 적극적으로 권장되는 사회분위기에다 사회생활 속에서 여성성에 대한 보호방안은 미미한 수준임.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했을 경우 피해여성에게 책임이 전가되거나 2차 피해로 이어지고 있음. 현행법은 육아휴직을 보장하고 있지만 많은 여성들이 인사상의 불이익을 당할 것을 우려해 이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사회생활자체를 포기함. 이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통해 성희롱 피해를 입은 노동자를 보호하는 사업자의 의무를 강화하고,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승진·승급·휴가 등의 차별을 금지하여 모성을 보호하고, 가정을 안정적으로 꾸릴 수 있도록 함.

■ 사회적 약자 배려 디딤돌 후보자

3. 심상정(정의당, 경기 고양 덕양구 갑)

*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근거마련

- 현재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남녀의 성별 및 국적·신앙·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임금 등 근로조건에 있어 차별대우를 받아선 안 됨. 하지만 노동현장에서는 고용형태나 인종 등 다양한 이유로 차별이 일어나고 있음. 이로 인해 저임금 노동자들은 아무리 일해도 빈곤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한국사회의 고질적인 사회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음. 이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문화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하층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또한 최저임금 인상 기준을 제시하고, 그 값이 전체 노동자 임금의 50%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최저임금이 생활 가능한 수준으로 인상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함.

4. 은수미(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중원)

: 비정규직 차별개선 및 확산저지 노력

* 비정규직 노동자의 확산 저지를 통한 노동시장 양극화 개선 노력

- 은수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은 상시적인 업무에 대한 간접고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비정규직 확산을 저지하여 노동시장 이중구조개선을 위한 긍정적인 법안임.

* 파견노동자 보호 노력

- 파견법 일부개정안은 파견노동이 가능한 업무와 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제조업의 생산공정 업무의 파견사업은 금지토록 하며, 차별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조합도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파견노동자에 대한 직접고용의무강화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흐름을 강화하는 데에도 크게 일조할 수 있음.

* 손해배상 청구 상한액 설정을 통한 노조활성화

-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은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노조활동을 무력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안은 조합규모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금액의 상한을 정하여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고 노조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기여할 수 있음.

■ 정치적 소신 디딤돌 후보자

5. 유승민(무소속, 대구 동구을)

* '국회법 개정안' 정치적 소신

- 2015년 5월 여·야 합의로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이 논란이 되었고, 박근혜 대통령은 6월25일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파문이 커짐. 급기야 7월 8일 유승민 후보자는 기자회견을 통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을 천명한 헌법 1조1항의 지엄한 가치를 지키고 싶었다", "더 이상 원내대표가 아니어도 더 절실한 마음으로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길로 계속 가겠다"는 말을 남기고 새누리당 원내대표직을 사퇴함.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가 시행령이 법률과 불합치하다고 판단하면, 시행령의 수정·변경 요구가 가능하도록 했음. 위법적 행정입법을 국회가 견제하는 것은 당연한 권한임.

* 정치적 소신 발언

- "5·16이 쿠데타라는 것은 상식이고 유신이 헌정질서를 파괴했다는 것에 많은 분이 동의하고 있다. 본인(박근혜 비대위원장) 생각을 국민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정리해야 한다."(18대 대선 전인 2012년 9월 대구 지역 언론인 토론회에서)

- "대통령의 1호 인사(대통령직인수위 첫 인사)에 대해 한마디 했는데 안 고쳐지는 것을 보고 입을 닫았다"(2013년 4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 "이거 누가 합니까. 청와대 '얼라'(어린이의 영남권 사투리)들이 하는 겁니까."(2014년 7월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박 대통령의 뉴욕 유엔총회 방문 기간 발언자료로 사전에 배포됐다 취소된 '중국 경도론' 내용을 비판, 정권에 상관없는 일관된 국가안보전략 작성을 촉구하며)

- "박 대통령은 집권 2년 동안 정책과 인사, 소통 모두 국민들의 기대에 못 미쳤다."(2015년 1월 당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앞두고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 청와대 정부와 정말 긴밀하게 진정한 소통을 하겠다. 무엇이 민심인지 더 나은 대안인지 같이 고민하는 가운데 정말 찹쌀떡같은 공조 이루겠다. 대신 우리 대통령, 청와대 식구들 장관들도 더 민심에 귀 기울이고 당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 임기 끝나는 날까지 혼신의 힘 다해 사심없이 모든 측면에서 열심히 잘 하겠다."(2015년 2월 당 원내대표 당선 인사에서)

-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중(中)부담-중(中)복지를 목표로 가진 자가 더 세금을 낸다는 원칙 아래 단계적 증세 방안을 여야가 고민하고 합의해야 한다" (2014/12/29, 국회 토론회)

- "134.5조원의 공약가계부를 더 이상 지킬 수 없다. (...) 지난 3년간 예산 대비 세수부족은 22조 2000억 원이다.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임이 입증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가진 자, 기득권 세력, 재벌 대기업의 편이 아니라, 고통 받는 서민 중산층의 편에 서겠다.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가는, 나누면서 커가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정당이 되겠다.(2015년 4월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 정책지향 : '따뜻한 보수'(2015년 4월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대표 연설)

- 세월호(통합과 치유) : 세월호 온전한 인양 및 인양비용 지원. 세월호 정치적 악용 벗어나 통합과 치유로 나아가야 할 것. 국가의 미래를 위한 합의의 정치 시작

- 양극화 해소 : 새누리당 가진 자, 기득권 세력, 재벌대기업의 편이 아니라, 고통받는 서민 중산층의 편에 서서 양극화 해소라는 시대적 과제 해결할 것. ▲단기 부양책 금지 ▲청년 고용 지원책 확대 ▲여성 경력단절 등 여성에 대한 차별 철폐 ▲이공계 우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 ▲대기업의 하청 단가 인상 등 요구

6. 진영(더불어민주당, 서울 용산)

* 공약 파기한 「기초연금법제정」 반대하고 장관직 사퇴

-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데 계속 반대했고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며 "그동안 반대해온 기초연금안에 대해 장관으로서 어떻게 국민을 설득하고 국회와 야당을 설득할 수 있겠느냐. 장관 이전에 나 자신의 양심의 문제"(2013년 9월29일 기자간담회에서)

* 양극화 완화위한 「사회적기업 설립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및 개정안」 발의

- 소득 불균형과 계층간 양극화 심화 극복을 위한 대안으로 국가의 시혜성 복지정책 외에 취약층의 지속적인 고용을 창출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제도기반 마련

- * 대·중소기업 양극화 개선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 대기업의 기술탈취에만 적용되는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당단가인하에도 적용해 하도급분야 공정거래질서 개선

7. 김성식(국민의당, 서울 관악갑)

- * 정부 여당(한나라당) 의원시절 국감에서 4대강 사업 등으로 인한 공기업 부채 심각성 지적
- 2009년 국감에서 4대강 사업 등 주요 국책사업에 참여하는 공기업들의 부채가 2012년 정도에는 302조에 달할 것이라고 그 심각성을 지적. “정부의 공식 국가부채 통계에는 공기업의 부채는 들어가지 않음. 토지공사, 한국전력 등 10개의 사업성 공기업을 조사한 결과 너무나 많은 부채가 발생할 소지를 발견. 2007년 말에는 120조였는데 이명박 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5년 후에는 302조로 무려 180조나 증가하게 됨. 잘못된 경우에는 상당부분 정부의 지원으로 이어지고 국민들의 빚으로 될 수 있음. 세종시 경우는 주택공사나 토지공사에 짐을 맡겼고, 4대강사업 또한 수자원공사에 짐을 맡김. 정부가 해야 할 일을 공기업에 맡기면서 공기업의 부실 문제가 생길 수 있음. 공기업의 부채나 정부의 보증채무는 심사를 받지 않는 그림자재정이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음” (2009.11.25 이데일리 인터뷰중에서)

* 합리적 경제통

- 18대 국회의원 시절 한나라당 내 개혁성향 초선의원 모임인 '민본21'을 이끌었고, 2009년 정부의 감세정책에 대해 과도한 감세는 재정 건전성과 소득 재분배 효과에 악영향을 가져온다며 감세유보 법안을 내놓음. 미디어법 처리 과정에서도 당론과 다르게 반대표를 던지고, 경쟁력과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조화롭게 추진하라고 정부에 촉구함.

* 18대 국회의원 당시 성실한 의정활동

- 3년 연속 경실련 우수 국감 의원 선정. 경제현안 정책자료집을 발간하고 이를 근거로 질의를 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국감을 수행했다는 점이 높이 평가받으면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 연속 기획재정부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바 있음. 18대 본회의 개근의원. 동료의원과 보좌관이 뽑은 우수의원 등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전개함. ☺☺☺

경실련, 경향신문 공동 공약 검증 20대 총선 4대 정당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경향신문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주요 정당의 분야별 공약을 검증한 결과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당·새누리당에 비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평가는 각 당이 제시한 9개 분야 총선 공약을 개혁성과 구체성, 실현가능성 등 3개 지표로 나눠 5점 척도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의당은 청년, 주거, 노동, 정치 개혁, 사법(국정원) 개혁, 통일·외교 등 6개 분야에서 4당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더민주는 보육, 노인, 재벌, 사법(국정원) 개혁 등 4개 분야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새누리당은 전 분야에 걸쳐 1~2점대 저조한 점수를 받았다. 통일·외교(2.9), 청년(2.5), 보육(2.4), 노인(2.4)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반면 정치 개혁(1.6), 재벌(1.3), 노동(1.0), 사법(국정원) 개혁(1.0)은 낮은 평가를 받았다.

더민주의 경우 보육(4.1)이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어 노동 공약(3.8)과 노인(3.7), 청년(3.6), 사법 개혁(3.6), 주거(3.5), 재벌(3.5), 통일·외교(3.4) 등에서 고른 점수를 받았지만 정치 개혁은 상대적으로 낮은 2.7점을 받았다.

국민의당도 보육(3.3)이 가장 좋은 점수를 받았다. 통일·외교(3.2), 청년(3.0) 분야가 3점대 평가를 받았고, 그 밖에 노인(2.7), 노동(2.4), 사법(국정원) 개혁(2.4), 정치 개혁(2.3), 주거(2.2), 재벌(2.0)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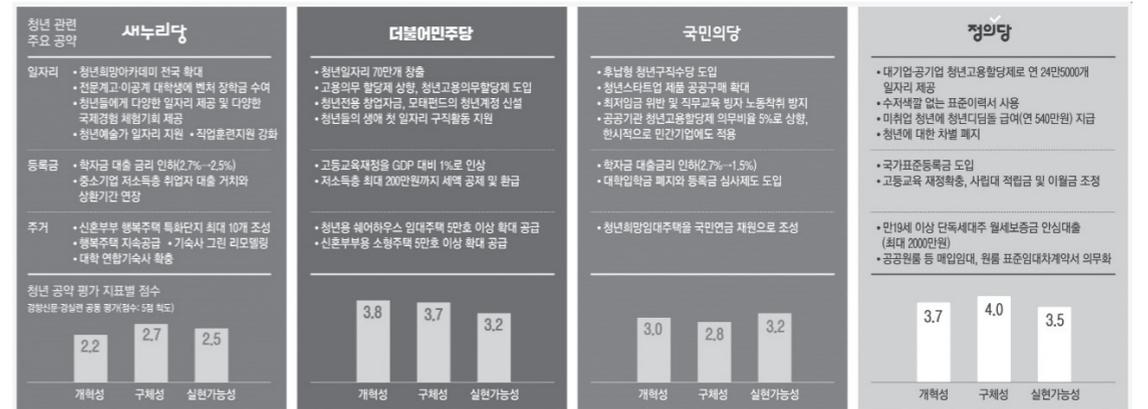
정의당은 주거와 노동 분야 공약이 각각 4.0점을 받았다. 이어 정치 개혁(3.9), 보육(3.8), 청년(3.7), 사법(국정원) 개혁(3.6), 통일·외교(3.5), 재벌(3.3) 순이었다. 노인 공약은 2.7점이었다.

주요 정당들의 20대 총선 공약은 전반적으로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여야가 공천 갈등과 분당 등 내용을 겪으면서 향후 4년간 국정 전반에 대해 어떤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해 나가겠다는 비전과 전략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고계현 경실련 사무총장은 “분야별로 여야의 입장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중요 분야에 대해 입장 표명을 하지 않는 등 많은 부분이 누락돼 있다”며 “대선을 앞두고 치러진 19대 총선의 경우 새로운 가치와 화두가 많이 제시됐는데 이번 선거는 상당히 후진적인 풍토로 치러지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 청년

주요 정당의 청년 공약을 일자리, 등록금, 주거 등 3개 분야로 나누어 5점 만점 척도로 평가한 결과 정의당(3.7)과 더불어민주당(3.6)이 국민의당(3.0)과 새누리당(2.5)에 비해 공약 완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평가 지표로 보면 정의당은 구체성(4.0)과 실현가능성(3.5)이 다른 당에 비해 가장 높았다. 더민주는 개혁성(3.8)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반면 국민의당은 실현가능성(3.2), 개혁성(3.0)에 비해 구체성(2.8)에서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았다. 새누리당은 개혁성(2.2), 구체성(2.7), 실현가능성(2.5) 모두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됐다.

지난 2월 청년실업률이 1999년 이후 역대 최고치인 12.5%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인 청년 일자리 공약은 야 3당이 큰 차이 없이 4점대의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반면 새누리당은 개혁성(2.0), 구체성(2.0), 실현가능성(1.5) 등 모든 지표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새누리당이 창조경제를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을 공약의 기본 틀로 제시하기는 했지만 청년에 특화된 일자리 창출 공약이 부족하고 구직자와 일자리를 이어주는 일자리 매칭에 중점을 뒀기 때문에 낮은 점수를 받았다.

등록금 및 학자금 공약은 정의당과 더민주가 새누리당·국민의당에 비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새누리당은 현재 2.7%인 학자금 대출금리를 2.5%로 0.2%포인트 인하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더민주도 고등교육재정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1%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의당은 학자금 대출금리 1.2%포인트 인하, 정의당은 국가표준등록금제 도입을 공약했다.

정치개혁

2016년 3월 4일

청년 주거 공약은 많은 허점을 노출했다. 새누리당은 기존 정부정책을 되풀이한 수준이었고, 더민주는 재원 마련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다. 국민의당은 공약 내용이 추상적이었고, 정의당은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근본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일자리

새누리당은 청년에 특화된 고용 정책을 제시하기보다는 '미래산업'을 성장시켜 전체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다양한 일자리 매칭행사로 청년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하겠다는 것이 주요 정책에 담겼다. 그러나 지속가능한 발전 비전이라는 측면에서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년 일자리 70만개 창출을 내걸고 대기업의 청년고용의무 할당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매우 높은 수준인 노동시간을 단축시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공약은 현재 상황에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청년 구직자와 일자리를 이어주기 위한 구체적 정책은 없었다.

국민의당은 청년고용할당제를 중심으로 하는 일자리 창출과 후납형 청년구직수당을 핵심 정책으로 제시했다. 특히 청년고용할당제를 한시적으로 5년간 공공기관과 1000명 이상 민간 대기업에 적용해 연 5만5000명의 청년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정책은 국회와 정부가 의지를 가지면 충분히 실현될 수 있는 정책으로 평가됐다.

정의당은 청년고용할당제, 미취업 청년에게 청년디딤돌 급여 지급(연 최대 540만원) 등 다양한 청년 고용 정책들을 구체성 있게 제시했다. 공공기관부터 인턴제 폐지, 1년 미만 재직자 퇴직금 지급 등 현재 청년 고용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짚었다. '수저색깔' 없는 표준이력서 사용, 채용 기준·절차·결과 투명화 등 불공정 채용 배제 등 취업 차별을 없애겠다는 정책도 의미가 있었다.

△등록금

한국의 대학진학률은 80%를 넘어서 보편교육 단계에 진입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학생의 등록금 부담은 높고, 대학교육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은 낮게 나타나고 있다. 당면 과제는 등록금을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낮추고 사립대 중심의 공급 구조를 국공립대 중심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공의 재정지원 및 실효적인 대학 구조조정 방안이 종합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총선 공약으로 각 당이 제시한 등록금 공약을 살펴보면 중장기 전망에 의한 종합대책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먼저 대학 구조개혁에 대해서는 4당 모두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정의당만 대학균형발전 방안으로 부실한 사립대의 국공립화를 제시해 비교적 근접한 방안을 제시했다.

새누리당은 지난 대선에서 장학금 확대와 대출이자 인하 등을 통해 실질적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이번 총선에선 등록금 부담 완화에 대해 학자금 대출이자 소폭 인하를 제시했을 뿐 실질적 대책을 찾아볼 수 없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제시한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를 통한 등록금 인하 공약은 개혁성이 높았다. 더민주의 저소득층에 대한 추가 지원, 정의당의 부담 가능한 수준의 구체적인 등록금 제시도 눈에 띈다. 그러나 관련법 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에서 양당 모두 실현가능성은 낮게 평가됐다.

국민의당은 국공립대 등록금 동결 등 소극적 대책과 학자금 대출금리 1.2%포인트 인하 등 등록금의 일부 부담 경감 방안을 제시했으나 재정소요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에 그쳤다.

△청년주거

각 당은 청년주거 공약을 중요하게 제시했다. 청년들이 주거비를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공공임대주택 공급에만 맞춰져 있는 한계가 있었다.

새누리당은 2017년까지 신혼부부 행복주택 특화단지 최대 10개 조성, 기숙사 그린 리모델링, 대학 연합기숙사 확충 등을 내걸었다. 대체로 정부에서 기존 추진하고 있는 행복주택에 의존하고 있다. 실질적 효과보다는 생색내기나 보여주기에 그쳤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년용 세어하우스 임대주택과 신혼부부용 소형주택 공급 등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장기적 관점에서 임대주택 비율을 현재보다 높여 주거 문제를 해결하려는 점은 의미가 있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재원 조달과 효과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국민의당은 국민연금 재원을 활용해 청년희망임대주택을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청년희망임대주택은 재원을 명확히 제시했으나 공급 대상자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얼마나 공급할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았다. 청년세대 주거 문제를 임대주택으로만 해결할 수 없기에 근본적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했다.

정의당은 주거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의 주거지원을 위해 월세보증금 안심대출(최대 2000만원)과 표준임대차계약서 의무화 등 다양한 공약들을 제시했다. 그러나 청년주거 문제의 근본적 대책으로는 미흡한 데다, 시급한 주거 문제를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 제시도 부족했다.

■ **보육**

4개 주요 정당의 보육정책 관련 공약은 다른 정책에 비해 각 정당이 공통적으로 제시한 항목이 많았다. 그만큼 복지정책이 유권자들에게 예민하게 받아들여지는 주제이며 각 당의 관심도 높아진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공립어린이집 및 유치원 확충 (국가재정·환경여건 고려)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 영아종일제 돌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육예산 100% 중앙정부 부담 ·국공립어린이집 전체 30%까지 단계적 확대 ·국민연금기금 보육시설 확충 투자 ·육아휴직 급여 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및 누리과정 국가책임 강화 ·보육료 현실화 및 보육교사 등 종사자 처우 개선 ·육아휴직 확대 및 급여 인상 ·육아휴직 신청 시 대체인력 채용 의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누리과정 100% 국고지원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육아휴직 파파키퀴터제(아빠의무휴당제) 3개월 추가 ·가족돌봄 휴가 도입,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기간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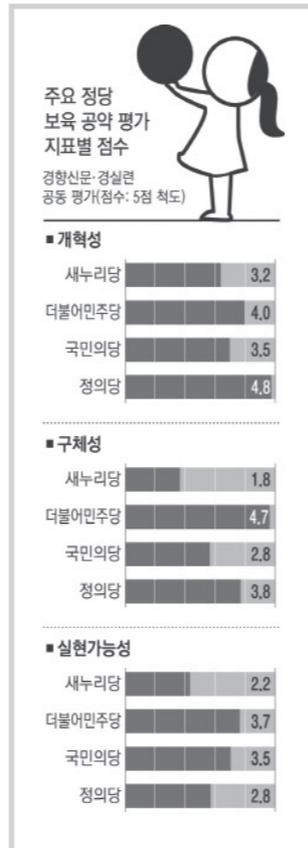
보육 공약에서 가장 높은 점수(5점 만점에 4.1점)를 받은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보육 예산을 100% 중앙정부에서 지원해야 한다거나, 현재 통상임금의 40%인 육아휴직 급여를 100%로 인상해야 한다는 등 구체적인 계획을 담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3.8점을 받은 정의당은 임신부 및 영유아 방문건강관리 제도와 출산 시 마더박스(필수 아기용품 상자) 제공 등 출산 시점부터 포함하는 포괄적인 공약을 제시했다는 점이 개혁성이 높은 점수를 얻었다.

다만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회복지세 신설을 제안하는 등 재원 마련 부분에서 실현가능성이 보강돼야 한다고 평가됐다.

4개 정당 모두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가 필요하다는 공약을 냈지만 온도차는 있다.

새누리당은 국가재정이나 환경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아 실천의지가 높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반면 더민주는 2016년 현재 약 500조원의 국민연금기금 중 일부를 금융부문에만 투자하지 않고 부족한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재원 조달 방안으로 제시해 개혁성과 실현가능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갈등을 빚었던 누리과정 등에 대해선 3개 야당은 국가 책임을 강조해 보편적 보육에 대한 유권자들의 요구를 적절히 반영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이에 대한 별다른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다.

새누리당을 제외한 3개 야당은 파파키퀴터제(아빠 육아휴직 할당제)나 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을 보육여건 개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특히 국민의당은 이 같은 정책이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어려운 현실적·환경적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대체인력 채용 의무화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이 긍정 평가를 받았다.

■ **주거**

주거 공약에서는 정당 간 평가가 극명하게 갈렸다.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4.0점과 3.5점을 받아 주거불안을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적극적 해결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반면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은 신혼부부나 노인 등 일부 대상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 공약 이외에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빈집 고쳐 매년 600호의 1~2인 가구 임대주택 공급 ·연기금 등 재무적 투자자 확대 등을 통해 뉴스타이 지속 공급 ·행복주택 신혼부부 특화단지 최대 10곳 조성 ·행복주택 공공실버주택 연간 800호 지속 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유 10년 동안 장기·공공임대주택(공공국민연금기금투재) ·청년층 세어하우스 임대주택 5만호 공급 ·신혼부부용 소형주택 5만호 이상 확대 공급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집백출법(공공주택특별법 개정) · 청년희망 임대주택 국민연금 재원으로 조성 ·출몰이르신 경로당 세어하우스(공공회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간 15만호의 반값 임대 공공주택 공급 ·공공주택 매입 임대 등 반차·역점방 고시원 열을 위한 청년 주거권 ·전·월세 상한제 실시·계약갱신청구권 보장 ·공정임대료 도입

정의당의 공약은 주거 불평등 해소에 방점을 찍었다는 점에서 긍정 평가를 받았다. 반값 임대 공정주택을 연간 15만호 이상 공급해 무주택 주민의 주거불안을 해소할 수 있고, 소득하위 20% 이하 무주택자 주거비 지원 확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공정임대료 등 공약도 주거약자를 위한 공약으로 꼽혔다. 다만 주택이 곧 투기수단이라는 국민 인식과 고착화된 부동산시장의 구조를 어떻게 깰 것인지, 기득권의 반발은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가 공약 실현의 관건으로 지적됐다.

더민주도 다양한 주택 공급 방안과 세입자 권리 강화를 통해 주거복지를 강조하는 공약을 제시했다.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소득계층별 맞춤형 주거지원, 세입자 권리보장 제도 등은 유권자가 체감

할 수 있는 구체성을 담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재원조달 측면에서는 의문부호가 찍혔다. 장기공공임대주택 85만호 공급에 국민연금 기금을 활용하겠다는 공약은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되며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해질 여지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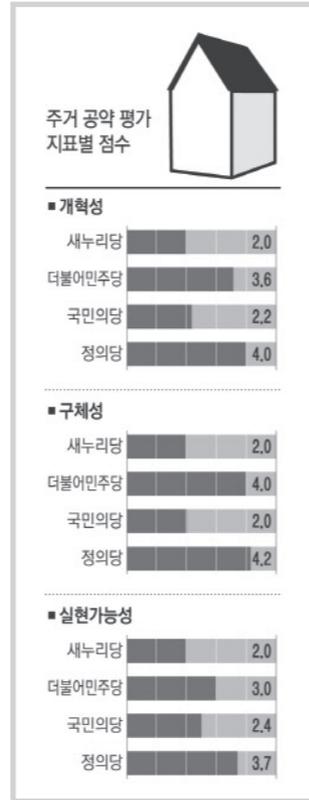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의 경우 무주택 세입자나 저소득층의 주거지원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도시 내 빈집 정비를 통한 임대주택 공급, 신혼부부·노인 대상 행복주택 확대 공급 이외의 다른 정책은 내놓지 않았다. 이마저도 어느 도시에 얼마나 공급할 것인지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민연금을 재원으로 임대주택을 지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제공하는 국민의당의 컴백홈법은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종합특별법을 제정한다는 의미가 있지만 그 내용은 원론적 수준에 그쳤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됐다. 홀몸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 세어하우스 공약도 일부 주거취약계층이 대상이어서 주거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에는 미흡했다.

■ 노인

“노령화 문제에 대한 인식이 부재하다.”

주요 정당 모두 노인 관련 공약에서 박한 점수를 받았다. 다양한 노인 문제를 포괄하는 정책보다는 좁은 영역에 국한된 대동소이한 공약을 내놓았다는 것이다. 5점 만점에 3.7점을 얻은 더불어민주당이 근소하게 높은 평가를 받았고,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2.7점, 새누리당이 2.4점이었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인 1연금 체계 구축 ·어르신 의료비 정액제 등 맞춤형 복지 ·어르신 일자리 대폭 확대 및 처우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연금 하위 70% 어르신에게 20만원 균등 지급, 단계적 30만원으로 인상 ·노인복지 예산 5년간 3% 증가를 유지 ·최빈계층 기초연금 ·불요자 방지법 도입 ·노인 일자리 창출: 일자리 수, 수당 2배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 폐지 ·노인복지 예산 5년간 3% 증가를 유지 ·일자리 유지 및 고령자 사회보험료 국가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2배 확대 및 본인부담금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폐지 ·공적연금 하나로 OECD 평균 수준 노후소득 보장 ·은퇴자 협동조합 등 사회경제공동체 지원 강화 ·노인 맞춤형 실버인테리어 확대

새누리당을 제외한 3개 정당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기초연금을 확대하고 국민연금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민주가 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기초연금 연계를 없애 혜택을 강화하는 정책은 빈곤층 노인을 위한 적절한 대책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기초연금을 인상하고 차등 없이 지급한다

는 공약도 개혁성 측면에서는 의미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추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등은 의문시됐다.

국민의당이 내놓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 폐지’ 공약은 노인 빈곤을 우려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이다. 하지만 실현 과정에서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의당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를 폐지하고 궁극적으로는 공적연금 하나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노후소득을 보장하겠다는 정책을 제시했다. 평가단은 “현 단계에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과 단계적 실천 방안은 미흡했다”고 짚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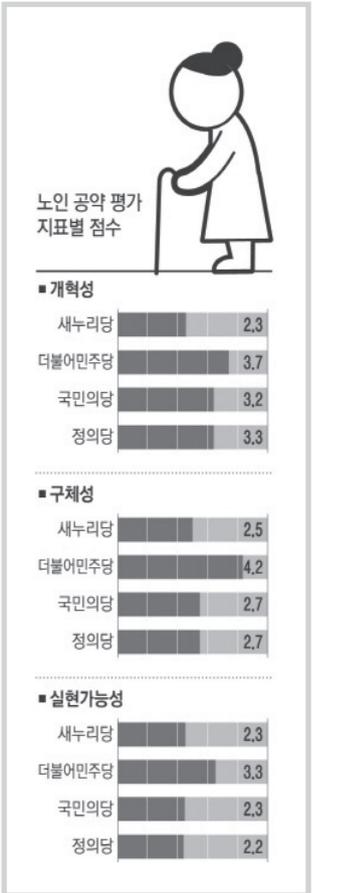
새누리당이 제시한 의료비 정액제, 치매고위험군 원스톱 서비스 등 공약은 실현가능성이 있는 정책으로 평가됐다. 문제는 재원 조달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고 단기적인 관점에서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국민연금 추가납부 허용은 수차례 나온 정책으로, 두루누리 사업(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저임금 노동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 50% 지원) 확대 등은 효과가 크지 않은 사업을 반복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각 당의 주목할 만한 정책으로는 새누리당 치매예방 운동교실, 더민주 주택연금제(노인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연금 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제도) 개선, 국민의당 공공장기요양 시설 확대, 정의당 실버임대주택 확대 등이 꼽혔다.

■ 정책검증 어떻게 했나

우리 사회 9개 핵심현안별 개혁성·구체성·실현가능성 평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경향신문 공동 정책검증은 3월25일 20대 국회의원 후보등록 마감 이후 우리 사회의 핵심 현안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9개 분야에 대한 정책·공약검증을 실시기로 했다. 이를 위한 평가지표의 개발과 분야별 정책검증·평가위원의 선정을 통해 진행했다.

9개 분야는 ①희망과 미래를 위한 청년문제 해결 ②거주기간 보장을 통한 서민주거안정 ③출산율 제고를 위한 공보육 정상화 ④노령사회 대비 노후소득 보장 강화 ⑤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⑥경제민주



화 실현을 위한 재벌개혁 ⑦비례성 강화와 지역주의 완화를 위한 선거제도 · 정치개혁 ⑧국민의 기본권 강화를 위한 국정원 · 사법개혁 ⑨남북 상호의존 확대를 통한 한반도 평화 등이다.

분야별 5인 내외의 검증 · 평가위원단은 정당들이 제시한 공약을 토대로 핵심 쟁점에 대한 각 정당 입장을 비교 · 분석했으며, 공약의 가치성(개혁성), 구체성(완결성), 적실성(실현가능성)을 중심으로 평가했다.

공약의 가치성(개혁성)은 환경, 성장, 국민편익 등을 고려해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공약인지, 국민의 참여와 권익을 강화하고 국가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담고 있는 정책인지를 기준으로 평가했다.

공약의 구체성(완결성)은 공약이 구체적이고 완결적인가를 평가하는 것으로 제시한 공약의 목표는 적절한가, 임기 동안의 연도별 추진 계획이 잘 제시되었는가, 공약에 따른 예산 배분 계획 및 재원 확보 방법이 적절한가 등을 기준으로 평가했다.

공약의 적실성(실현가능성)은 공약 목표가 국가 현황에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는가, 국회의 권한과 임기 내에 달성가능(실현가능)한가 등을 기준으로 평가했다.

위 3가지 평가지표별로 세부 평가기준을 고려해 5점 만점으로 5점(매우 좋음), 4점(좋음), 3점(보통), 2점(나쁨), 1점(매우 나쁨)으로 점수를 부여한 정량평가도 실시했다. 향후 4년간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결정하는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매우 중차대한 의미를 지닌 4·13 총선이다. 유권자들이 객관적 · 합리적 기준으로 후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검증 결과를 공개하고자 한다. ☺☺☺

[경실련 20대 총선 정당 공약평가]

1. 청년 공약

1. 평가단 구성

- 서순탁(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 김혜진(세종대학교 경영학과)
- 나병현(경실련 교육위원장)
- 윤철한(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장)
- 남은경(경실련 사회정책팀장)
- 권오인(경실련 경제정책팀장)

2. 공약 비교표

세부공약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일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함께 일하는 즐거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희망아카데미 전국 확대로 일자리 연계, 교육, 창직 원스톱지원 - 전문계고, 이공계 대학 재학 시 벤처 학자금 수여로 벤처기업 취업연계 - 청년들에게 일자리 제공 및 다양한 국제경험 체험 기회 제공 - 청년예술가 일자리 지원, 문화를 통한 기업 · 경제활성화 • 우리집 행복 맞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정규직 · 청년 등 계층에 대한 직업훈련지원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좋은 일자리 창출과 행복한 민생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더좋은' 청년일자리 70만개 창출 - 고용의무 할당률 상향 및 청년 고용의무 할당제 도입. - 노동시간 특례업종 축소 등으로 실노동시간을 단축하여 일자리 창출 ②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창업환경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전용 창업자금, 모태펀드의 청년계정신설 및 청년 중소 · 벤처기업의 창업활성화 지원 ③ 청년안정망 도입으로 청년들의 생애 첫 일자리 구직 활동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일자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후남형 청년구직수당 도입 ② 청년스타트업 제품의 공공구매 확대 ③ 청년구직자의 인권보호 ④ 근로기준법 강화를 통한 최저임금 위반 및 직무교육 병자 노동착취 방지 • 노동 · 일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년고용할당제를 공공기관 의무비율 5%로 상향하고 한시적으로 민간기업에도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들의 일자리와 설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공기업/대기업 청년고용 할당제로 연 24.5만개 일자리 ② 수저색깔 없는 표준이력서 사용, 채용기준 · 절차 · 결과 투명화 ③ 미취업 청년에게 청년디딤돌급여(연 최대 540만원) 지급 ④ 청년에 대한 차별 폐지, 1년 미만 재직자도 퇴직금 지급
등록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자금 대출금리 0.2%(2.7%~2.5%) 인하 • 중소기업 저소득층 취업자 대출 거치와 상환기간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교육재정을 GDP 대비 1% 인상 • 대학투자 확대 • 저소득층 최대 200만원까지 세액 공제 및 환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자금 대출이자율 인하 (2.7% ~ 1.5) • 대학입학금 폐지와 등록금 심사제도 도입 • 국가장학금제도 공정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표준등록금 도입 • 고등교육 재정확충 및 사립대 적립금 및 이월금 조정

- **신혼부부 행복주택 특화 단지 조성**
- 신혼부부 행복주택 특화 단지 '17년까지 최대 10개 조성
- **행복주택 지속공급**
- 정부는 '17년까지 14만호 공급계획으로 현재 9만여호 확정
- **기숙사 그린 리모델링**
- 기숙사 그린 리모델링 통한 그린캠퍼스 구현
- **대학 연합기숙사 확충**
- 국·공유지 등을 기숙사 건립 부지로 활용하여 여러 대학의 학생들이 공동으로 거주할 수 있는 연합기숙사 건립을 확대
- **청년용 셰어하우스 임대 주택, 신혼부부용 소형주택 공급**
- 2~4룸식의 청년용 셰어하우스 임대주택 5만호 이상 확대 공급
- 신혼부부용 소형주택 5만호 이상 확대 공급 및 주거 지원 대출 요건 완화
- **청년희망임대주택 공급**
-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 청년세대의 주거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청년희망임대주택"을 국민연금 재원으로 조성
- **반지하·옥탑방·고시원 탈출을 위한 청년 주거지원**
- 만19세 이상 단독세대주 월세보증금 안심대출(최대 2천만원)
- 공공원룸 등 매입임대, 원룸 표준임대차계약서 의무화

주 거

3. 평가지표

평가 지표	세부 평가 기준
공약의 가치성 (개혁성)	-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가? -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가? - 국민의 참여와 권익을 강화하는 정책인가?
	정책공약이 나라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담고 있는가?
공약의 구체성	- 공약이 구체적이고 완결적인가, 적절한 범위인가? - 임기동안의 연도별 추진 계획이 잘 제시되었는가? - 제시한 공약의 목표는 적절하게 제시되어있는가? - 공약에 따른 예산 배분 계획 및 재원 확보 방법이 적절한가?
	정책공약이 육하원칙에 의거 명확하게 유권자가 이해할 수 있는가?
공약의 적실성	- 공약 목표가 국가 현황에 적절하게 설정되어있는가 - 공약이 해당 정책 환경과 얼마나 부합하는가 - 권한에 부합하고 임기내 달성가능(실현가능)한 공약인가
	정책공약이 시급성과 정책 환경에 부합하고 실현 가능한가?

4. 총평

- 청년 일자리, 학자금, 주거 공약을 평가한 결과,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당과 새누리당에 비해 공약완성도가 높았음
- 세부 지표로 보면, 정의당은 구체성과 적실성이 다른 당에 비해 가장 높았으며, 더불어민주당은 가치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음. 반면 국민의당은 구체성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으며

새누리당은 가치성, 구체성, 적실성 모두 가장 낮게 평가 받았음

- 청년 일자리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이 큰 변별력 없이 비슷한 높은 평가를 받음. 새누리당은 가치성, 구체성, 적실성 모두 다른 당에 비해 혹평을 받았음
- 청년 학자금 공약은 새누리당·국민의당에 비해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높게 평가받음.
- 청년 주거 공약은 새누리당이 기존 정부정책 되풀이 내용, 더불어민주당은 재원마련에 대한 고민부족, 국민의당은 추상적인 공약내용, 정의당은 청년주거안정에 근본해결책(정의당은 전체 서민주거안정 공약내용이 실현된다면 청년을 비롯한 모든 계층의 주거불안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높음) 제시하지 않아 한계가 뚜렷했음. 청년주거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비슷하게 높은 평가를 받았고, 국민의당과 새누리당이 낮은 평가를 받았음. 새누리당은 구체성과 적실성에 비해 가치성은 낮은 평가를 받았고, 더불어민주당은 구체성은 높았으나 가치성과 적실성은 좀 낮게 평가받았음. 국민의당은 가치성에 비해 구체성과 적실성이 부족했고, 정의당은 구체성과 적실성에 비해 가치성이 낮았음

< 일자리 >

- 새누리당은 창조경제를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청년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청년에 특화된 일자리 창출 공약이 부족하고 대부분 구직자와 일자리를 이어주는 일자리 매칭에 중점이 두어져 있어 현실성이 부족함.
더불어민주당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고 있는 면에서 가치가 높음. 청년취업활동지원금 지급은 재원 부담이라는 면에서 현실가능성이 의문시됨
- 국민의당은 구직자와 일자리를 이어주는 일자리 매칭보다 청년고용할당제를 중심으로 하는 청년 일자리 창출과 후납형 청년구직수당이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이지 않고 실효적인 효과도 한계가 있음.
정의당은 청년고용할당제, 청년디딤돌 급여, 공정한 채용, 청년 일자리 질 개선 등 다양한 청년 고용 정책들을 구체성과 적실성을 높게 제시하고 있으나 청년고용할당제 대상, 청년디딤돌 급여 재원 마련에 대한 대책이 부족함

< 학자금 >

- 한국의 대학등록금(사립대 및 국공립대) 수준은 OECD 국가 중 미국에 이어 상위권으로 한국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은 매우 높은 실정임. 대학진학률이 80%를 넘어서 보편 교육의 단계에 진입했지만 대학교육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은 OECD 국가비교에서 낮게 나타남. 현재 당면 과제는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등록금 절대금액을 낮추고 사립대 중심의 대학교 공급 구조를 국공립

대 중심으로 개선해야함. 이를 위해 공공의 재정지원 및 실효적인 대학 구조조정 방안이 종합적으로 제시되어야 함. 그러나 총선 공약으로 정당이 제시한 등록금 공약을 살펴보면, 중장기 전망에 의한 종합대책으로는 한계가 있음

-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해 등록금을 낮추려는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은 개혁성과 가치성이 높았고, 정의당은 부담 가능한 수준의 구체적인 대학등록금 액수를 제시해 개혁성과 구체성 높음. 그러나 재원마련을 위해 조세제도를 개편하고 관련법을 제정해야 하는 등 양당 모두 실현가능성은 낮아 보임.

대학 구조 개혁에 대해서는 4개당 모두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못했으나 정의당은 대학균형발전방안으로 부실한 사립대의 국공립화를 제시해 비교적 종합적인 대책에 근접한 방안을 제시했음.

- 국민의당은 국공립대 등록금 동결 등 소극적 대책과 등록금의 일부 부담 경감방안을 제시해 재정소요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제시에 그쳤음.

새누리당은 등록금 부담완화에 대해서는 대출이자 소폭 인하 등 실질적 대책이 없어 청년의 등록금 부담 경감에 대한 당의 의지를 확인하기 어려움.

< 주거 >

- 청년들이 주거비를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각 당이 청년 주거공약을 중요하게 제시한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함. 그러나 청년주거공약이 청년주거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 주택공급과 배분, 관리에 대한 종합적 고민 없이 공공임대주택 공급에만 맞춰져 있는 한계가 있음

- 새누리당은 기존의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복주택을 그대로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보다는 생색내기나 보여주기식 공약에 그치고 있음.

더불어민주당은 청년용 셰어하우스 임대주택과 신혼부부용 소형주택 공급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 하고 국민의당은 국민연금 재원을 활용해 '청년희망임대주택'을 조성하는 공약을 발표함. 그러나 청년주거가 장애인, 노인, 저소득 가구에 비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재함.

- 정의당은 반지하·옥탑방·고시원 탈출을 위한 청년주거지원을 위해 월세보증금 안심대출과 표준임대차계약서 의무화를 공약으로 제시해 상대적으로 내용이 빈약함. 그러나 공공임대주택공급 확대, 세입자의 권리강화를 강화하기 위한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보장, 공정임대로 도입, 소득하위 20%이하의 주거비 지원 강화, 분양원가 공개 및 분양가상한제 확대, 임대소득과세 정상화 등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과 불로소득 제거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 있음.

5. 세부평가

1) 가치성(개혁성)

① 새누리당

< 일자리 >

- 새누리당은 창조경제를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청년공약의 전면내내 내세워 제시하고 있으나 초점은 청년 취업 매칭에 맞추어져 있어 본질적인 해결책에는 부족해 보임
- 특별히 청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들보다는 5대 고부가가치 분야, 초 혁신 분야 등 미래산업을 성장시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 주요한 일자리 정책이나, 이 공약은 고용정책이라기보다는 산업정책이라고 보이며 얼마나 청년고용 효과가 있을지 의문시됨. 또한 청년 국제인턴 확대, 창업지원 등을 제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대상이 얼마나 될지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 이 외에 시간제 청년노동자들을 위한 복수 사업장 근무자에 대한 합산 고용보험 적용과 취약계층 청년들에 대한 훈련지원비 지원, 자격증 응시료 지원은 현재 수저논란 등 사회격차에 따른 취업의 질 차이라는 현상에 비추어 미미한 정책이라고 보임

< 학자금 >

- 공약의 내용과 수준 모두 낮음. 실질적 대책 없음. 새누리당은 지난 대선에서 장학금 확대와 대출이자 인하 등을 통해 실질적인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음. 정부는 대학등록금 중 국가장학금 지급으로 전체 등록금의 절반을 충당해 공약이 이행했다고 홍보하고 있으나, 세부 내용을 보면 장학금에 기존 대학에서 지급하던 장학금이 포함되어 있고, 대출이자도 1% 인하에 그치는 등 체감할 수 있는 공약 이행으로 보기 어려움.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는 다른 대책없이 대출이자 0.2% 인하를 공약으로 제시한 것은 대학등록금 문제에 대한 개선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주거 >

-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을 갖춘 신혼부부 행복주택을 공급하는 저출산시대를 대비한 공약으로 취지에 공감함. 그러나 특화단지 조성 등을 통해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제공한다는 의미는 있지만, 특화가 자칫 또 다른 차별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청년들이 땀 흘려 일하면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다는 희망을 줄수 있는 근본적 주택시장 정상화 정책이 빠져 있음

② 더불어민주당

< 일자리 >

- 청년의 “더 좋은” 일자리 70만개 창출을 위해 공공분야 일자리 창출, 민간대기업 청년고용의무 할당제 실시, 노동시간 단축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청년안전망 고용서비스 구축을 제시함. 이는 청년 일자리를 노동시장 내의 정책으로 창출하겠다는 것으로 문제해결의 방향성이 정확하다고 볼 수 있음.
- 특히 현재 OECD 국가들 중 아주 높은 노동시간과 관련해, 1주 상한 주 52시간 준수, 노동시간 특례업종 및 제외업종 축소, 포괄임금제 금지, 출퇴근시간기록 보전의무제 도입, 공휴일 대체휴 일제 민간기업 적용 등으로 기업의 양보와 노동자의 희생을 통한 11만 8천개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책은 새로운 산업으로 일자리를 창출하지 않아도 현재의 상황에서도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학자금 >

- 대학에 대한 공공재정 지원을 통해 등록금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은 가치성 높음. 저소득층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효적 대책으로 판단됨

< 주거 >

-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을 향후 10년 동안 2배 이상 증가시켜 무주택 서민의 주거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려 한다는 점에서 가치가 높음. .
- 장기적인 관점에서 임대주택의 비율을 현재보다 높여서 주거문제를 해결하려는 점과 보육시설의 확충을 통해 주거환경개선 및 보육문제를 해결하려는 공약은 의미있음. 그러나 청년용 쉼어 하우스 공급은 비싼 주거비부담을 나누겠다는 의미는 있지만 그 만큼 주거의 질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 최선의 청년주거정책인지는 의구심이 듬

③ 국민의당

< 일자리 >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청년의 연령을 34세로 상향조정하는 정책을 제시하고 있음. 청년고용 확대와 중소기업의 청년고용지원 확대 효과를 기하고자 하는데, 고용분야에서의 청년 연령의 상향조정은 현재의 늦은 취업 현상을 반영하여 필요하고 적절한 정책으로 평가함.

- 청년스타트업 제품의 공공구매를 통한 청년창업 활성화 지원도 제시하고 있는데, 청년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임.

< 학자금 >

- 재원마련이라는 현실적 한계로 대학생의 보편적 등록금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은 제시되지 못함.

< 주거 >

- 청년세대의 주거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청년희망임대주택 공급 공약은 주거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서 의미가 있음. 그러나 새누리당과 마찬가지로 청년세대의 주거문제를 임대주택의 공급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님

④ 정의당

< 일자리 >

- 미취업 청년에게 청년디딤돌 급여를 연 최대 540만원까지 지급하여 소득 하위 70% 청년들이 취업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과 자발적 실업자도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알바 등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청년들의 사회안전망에 대한 정책도 제시하고 있음. 현재 청년미취업자들의 생활고를 덜고 취업의 질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구체적 재원마련은 의문시됨.
- 또한 수저색깔 없는 표준이력서 사용, 채용기준·절차·결과 투명화로 가정환경 등에 따른 채용 불이익 배제, 고위공직자 부정 취업청탁 방지 등을 공약으로 제시하여 사회계층 간 격차에 따른 취업의 차별을 없애겠다는 정책도 의미 있음.

< 학자금 >

-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등록금 절대금액을 낮춘 표준등록금을 제시하고 정부의 재정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가치성 높음

< 주거 >

- 주거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의 주거지원 등 최근 우리사회가 겪고 있는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월세보증금 안심대책, 표준임대차계약서 의무화를 제시하고 있지만, 청년들의 시급한 주거문제를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의 제시는 부족함

2) 구체성

① 새누리당

< 일자리 >

-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현재 노동시장 내에서의 접근이 충분히 가능함에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청년일자리 공약으로 제시되고 있지 않아, 지속가능한 발전 비전이라는 측면에서 부족해 보임.
- ‘청년기본법’ 제정으로 통합적 청년 정책 수립의 법적 근거 확보를 하겠다는 정책이 제안되어 있으나, 기존의 청년정책들을 통합하는 기능 이외에는 청년들의 사회·정치 참여를 촉진한다는 등 그 구체적 내용이 명확하지 않음.

< 학자금 >

- 구체적 계획이 없는 단편적 대책임.

< 주거 >

-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공약 내용이 구체적이지는 않으나 연간 목표치의 제시, 자원조달방안 제시하고 있어 국민이 이해할 수준의 구체성은 갖추고 있음. 그러나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공약 가운데 공공임대주택을 제외한 다른 공약이 없음. 예를 들어 세입자의 권리강화, 주거비 지원 확대, 전월세 증가속도 조절을 위한 정책 제시 등 주거안정에 필수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아 공약의 완결성이 매우 떨어짐.

② 더불어민주당

< 일자리 >

- 청년 창업 환경개선을 위해 청년전용 창업자금을 활성화하는 등의 정책을 제시하고 있음. 청년 일자리 창출에 창업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 정책은 특별히 청년 창업을 활성화시킬 것으로 기대하기에는 자금이나 계획이 부족해 보임. 청년 구직자와 일자리를 이어주는 구체적 정책이 없음.

< 학자금 >

- 고등교육재정을 확충해서 등록금 경감 및 대학투자를 확대하는 방안은 적실성이 있으나 어떤 수

준으로 경감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음. 대학투자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되지 못했고, 소득연계형 등록금 제도 검토는 방향성만 짐작할 수 있어 완결성은 낮음

< 주거 >

- 국공립 보육시설을 필요한 최소의 비율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고,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추세에서 청년용 셰어하우스나 신혼부부용 소형주택이 필요하다는 현재의 트렌드를 잘 반영하여 있음

③ 국민의당

< 일자리 >

- 취업 후 할증고용보험료로 납부하는 후납형 청년구직수당을 가구소득 70% 미만의 청년구직자들을 대상으로 도입하는 정책을 제시하고 있는데, 재정적인 부담을 덜면서 청년구직자들의 생활을 보장해주는 의미로 구체적임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구직자 인권보장관련 조항 신설로 구직자의 인권보호에 관한 제시정책은 청년들이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경험을 긍정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지만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성이 부족함. 청년 구직자와 일자리를 이어주는 구체적 정책이 없음.

< 학자금 >

- 대학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등록금심사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적절한 방안으로 보이나, 심사제도를 등록금 인하방안으로 보기 어려움

< 주거 >

- 청년세대의 주거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청년희망임대주택 공급 공약의 경우, 공약 내용은 구체적이지는 않으나 임기 내 목표치의 제시, 자원조달방안 등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는 충분함.
- 청년희망임대주택의 경우 경제적인 여력이 다소 낮다는 이유로 청년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것인지 공급대상자를 빈곤층과 중산층 등으로 구분을 하여 선별을 한다는 것인지, 얼마나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음.

④ 정의당

< 일자리 >

- 청년들이 근무하는 일자리의 질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공공기관부터 인턴제도 폐지, 근로감독관 2배 충원과 나쁜 일자리 정보 검색 제공, 청년에 대한 차별 폐지, 1년 미만 재직자 퇴직금 지급을 제시하고 있어서 미래의 비전만이 아니라 현재의 청년고용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공약들도 포함하고 있어서 구체적임

< 학자금 >

- 가정의 한 달 가처분소득 수준으로 표준등록금액을 제시해 부담가능한 수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으며, 합리적 접근으로 보임.

< 주거 >

- 청년주거 문제를 해결을 위해 반지하·옥탑방·고시원 탈출을 위한 월세보증금 최대 2000만원 안심대출, 표준임대차계약서 의무화 등 구체적으로 공약을 제시하고 있지만, 주거문제 해결에 근본적 대책이 아니라 의미가 퇴색됨

3) 적실성(실현가능성)

① 새누리당

< 일자리 >

- 지역 산업계, 대학, 고용서비스기관을 연계하여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고용존'을 구축하여 멘토링, 매칭데이, 미니박람회 등 다양한 매칭행사를 통해 청년구직자와 기업을 연결하겠다는 정책, 청년희망아카데미의 확대로 일자리, 교육, 창직을 지원하겠다는 정책, 창조형 소공인 육성 및 융합형 전통시장 확산 정책, 벤처학자금 수여로 벤처기업 취업 연계 정책, 청년예술가 일자리 지원, 중소기업 취업자 중 저소득층 대상 학자금 대출 거치 및 상환기간 추가 연장 허용 정책, 저소득층 및 중소기업근로자 국비유학기회 수혜대상 확대 정책 등을 다양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음.
- 그러나 청년 구직자와 일자리를 이어주는 실효적 정책이 빠져 있음. 특히 벤처학자금 정책이나 중소기업 취업자 국비유학기회 정책 등은 자금여력이 적은 벤처기업에서 학자금 일부를 제공해야 하고 인력난으로 사람이 부족한 중소기업에서 핵심 인재를 유학을 보내야 한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실현가능성에 의문이 듦.

< 학자금 >

- 4년간 대출이자 0.2% 인하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데 영향을 미치기 어려움.

< 주거 >

- 최근 심화되고 있는 주거불안의 해소를 바라는 국민의 염원을 충분히 담아내고 있지 못하고 있음. 빈집을 활용한 소형 임대주택 공급은 년 600호 수준이며 신혼부부용 행복주택은 2017년까지 최대 10개 단지, 공공실버주택도 연 800호 수준에 그치고 있는 등 주택공급물량이 매우 적어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의지가 의심스럽고 시행효과도 적을 것임.
- 행복주택의 공급은 부지가 한정적이고 입지도 주거에 적합도가 떨어지는 곳이 대부분이어서 이곳에 자녀양육과 노인복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음. 특화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차별'의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음.

② 더불어민주당

< 일자리 >

-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청년안전망을 도입하여 취업활동지원(6개월간 60만원), 청년내일찾기패키지 확대 등을 제시하고 있음. 장기화되는 청년들의 구직기간 중 지원을 필요하지만, 재원마련의 현실성에 의문이 듦.

< 학자금 >

- 재정계획과 조세개혁을 통해 소요재원을 마련하겠다고 제시했으나, 소요재원에 고등교육재정 수요는 포함되지 않음. 대학등록금 세액공제 등은 실현가능성 높음

< 주거 >

- 정책은 구체적이지만 그동안 제안되었던 주거복지 정책들과의 차별성이 부족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재원조달과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문

③ 국민의당

< 일자리 >

- 청년고용할당제를 한시적으로 5년간 공공기관과 1,000인 이상의 민간대기업에 적용하여 연

55,000명의 청년고용을 창출하겠다는 정책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의 높은 청년실업률을 감안할 때, 반드시 필요하며 국회와 정부가 의지를 가지면 충분히 실현될 수 있는 정책이라고 보임.

- 현장실습생, 인턴들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도록 근로기준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취업난을 이용하여 청년들을 악용하는 현재 문제점에 비추어 중요하고 실현가능한 정책으로 판단됨.

< 학자금 >

- 등록금 부담 경감 효과가 국공립대 학생에만 집중될 수 있어 형평성이 결여된 대책임. 입학금 폐지로는 체감 효과가 미미하고, 등록금 심사제도는 등록금 인하방안으로 보기 어려움. 국가장학금제도 개선은 실현가능성은 높은 공약임

< 주거 >

- 국민연금을 활용한 청년희망임대주택 공급 확대는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며, 청년임대주택의 공급은 선별여부에 대한 뚜렷한 기준을 마련도 필요함

④ 정의당

< 일자리 >

- 공기업/대기업(300인 이상) 5% 청년고용할당제로 연 24.5만개 일자리 창출을 청년 일자리의 정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방향성은 정확하다고 보이지만, 민간적용대상 범위를 300인 이상으로 넓게 설정하여 실현가능성에서 의문이 제기된다.

< 학자금 >

- 법인세와 내국세를 통한 재원 마련방안은 합리적 조세개혁방안이나, 표준등록금 도입에 따른 소요재원이 불명확하고 관련법 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실현가능성은 낮음

< 주거 >

- 상대적으로 월세보증금 안심대출,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의무화 등 제시한 공약이 사회적 논란이 적어 실현될 가능성이 높으나 청년주거 해결을 위해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임 ☹☹☹

[경실련 20대 총선 정당 공약평가]

2. 주거 공약

1. 평가단 구성

- 서순탁(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김유찬(홍익대학교 세무대학원)
- 최봉문(목원대학교 도시공학과) 박경준(법무법인 인의 변호사)
- 윤철한(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장)

2. 서민주거안정 공약 비교표

세부공약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공공 임대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빈집을 고쳐 매년 600호 수준의 1~2인 가구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 준공 후 기금지분인수, 임대기간 중 지분매각, 연기금 등 재무적 투자자 확대 등을 통해 뉴스테이 지속 공급 • 행복주택 신혼부부 특화 단지 최대 10곳 조성 • 행복주택 공공실버주택연간 800호 지속 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10년 동안 장기공공 임대주택을 85만호 공급하여 13%까지 확충(국민연금기금 투자정책) • 청년용 셰어하우스 임대주택 5만호 공급 • 신혼부부용 소형주택 5만호 이상 확대 공급 및 주거지원 대출 요건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캠백홈법'(공공주택특별법 개정) - 청년세대의 주거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청년희망임대주택"을 국민연금의 재원으로 조성 • 홀몸어르신 경로당 셰어하우스(공동회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15만호의 반값임대공공주택(정의stay) 공급 (거품없는 가격의 토지공공보유 건물분양, 공공분양, 장기임대, 장기전세, 분납임대 등의 공공주택) • 월세보증금 안심대출, 공공원룸 매입임대 등 반 지하·옥탑방·고시원 탈출을 위한 청년 주거지원
세입자 권리강화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의 도입,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전월세 전환율의 적정 수준 인하 • 전월세 전환율을 기존 배수에서 기준금리+α로 변경(인하), 임대기간 연장 등 임대차인 권리관계 개선 • 보증증권 기반, 전세자금<누구나전세보증제도> 도입 • 주택금융공사의 임차보증금 4억원 이하 전세대출 보증료율을 0.1%로 고정 • 준공공임대 지원강화로 전세물량 공급확대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월세상한제 실시·계약갱신청구권 보장 • 공정임대로 도입 • 전세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주거지원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2년까지 550만 주거 취약가구 전체로 주거지원 확대 추진과 자치단체별 '주거상담센터' 운영 주거급여 확대 및 급여요율 현실화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하위 20% 이하 무주택자에게 월 20만원 주거비 지원
주택시장 정상화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대사업자 양성화 지원 방안 마련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상한제 확대 후분양제 이행 재개발재건축 사업추진 기준 강화
불로소득 제거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지불로소득 공평과세, 개발이익환수 강화로 부동산거품 제거 및 저렴한 주택공급 촉진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대소득과세 정상화 과세기준 시세(실거래가 기준)으로 전환 재개발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강화

3. 평가지표

평가 지표	세부 평가 기준
공약의 가치성 (개혁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가? 국민의 참여와 권익을 강화하는 정책인가?
	정책공약이 나라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담고 있는가?
공약의 구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약이 구체적이고 완결적인가, 적절한 범위인가? 임기동안의 연도별 추진 계획이 잘 제시되었는가? 제시한 공약의 목표는 적절하게 제시되었는가? 공약에 따른 예산 배분 계획 및 재원 확보 방법이 적절한가?
	정책공약이 육하원칙에 의거 명확하게 유권자가 이해할 수 있는가?
공약의 적실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약 목표가 국가 현황에 적정하게 설정되어있는가 공약이 해당 정책 환경과 얼마나 부합하는가 권한에 부합하고 임기내 달성가능(실현가능)한 공약인가
	정책공약이 시급성과 정책 환경에 부합하고 실현 가능한가?

4. 총평

- 평가결과로 정의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새누리당 순으로 높은 평가를 받음. 평가지표 모두 정의당이 높은 평가를 받음.
- 서민들의 주거안정은 국가적 책무로, 헌법에서 보장된 기본권인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땀 흘려 일하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함. 하지만 현재 치솟는 전월세가격으로 갈 곳을 잃어가는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정책은 펼치지 않고 있음.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주거급여를 대폭 확대하고 공공임대주택을 늘려야 함. 또한 고소득 다주택자에 대한 임대소득 과세와 불로소득

특은 철저히 환수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함. 무엇보다 다수의 중산층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안정적 거주기간 보장과 급격한 주거비 폭등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이러한 가치에 가장 부합하는 공약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공약임.

-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각 정당의 공약을 비교해보면,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은 최근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극심한 주거불안에 대한 인식과 해결의지가 부족한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심각한 사회로 인식하고 적극적 해결의 의지를 보이고 있음.
-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은 신혼부부와 노인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에 공약만 있고, 고통 받는 무주택 세입자나 저소득층의 주거지원을 위한 아무런 정책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더불어민주당은 주거복지의 관점에서 세입자의 주거권 강화, 선순환 계층맞춤형 주거지원, 불로소득 제거 정책을 제시하고 있음. 정의당은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분양원가공개와 후분양제 도입 등 부동산 시장 구조개선, 반값임대 공정주택, 전월세상한제 등 세입자의 권리강화, 주거급여 확충 등 가장 혁신적인 공약을 담고 있음

5. 세부평가

1) 가치성(개혁성)

① 새누리당

- 도시 내 빈집을 정비하여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는 구상은 경제와 인구의 저성장시대에 부합한 공약이라 할 수 있음. 또한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을 갖춘 신혼부부 행복주택을 공급하고 복지서비스와 결합된 공공실버주택을 공급한다는 구상도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공약이라 할 수 있음.
- 그러나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주거불안 심화와 주거비부담 급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정부개입을 통한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볼 때 새누리당의 공약의 한계가 명확함. 주택임대차시장에 대하여는 아무런 대안도 없고, 서민주거불안에 대한 역할을 회피하고 있음.

② 더불어민주당

- 더불어민주당의 서민주거안정 공약은 주거 불평등 해소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하고 있음. 우선 장기공공임대주택을 향후 10년 동안 2배 이상 증가

시켜 무주택 서민의 주거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려 한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음.

- 다양한 주택의 공급방안과 세입자 권리강화를 통한 주거복지의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전월세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거나 갱신청구권의 도입 등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임차인들의 주거불안정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입안이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함
- 그러나 주택매매 시장에 대한 서민 정책이 부족하고, 주거복지확대에 따른 재원확보와 임대소득 과세에 대한 입장이 없음

③ 국민의당

- 홀몸 노인들을 위한 경로당 쉼어하우스 공급, 청년세대의 주거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청년희망 임대주택 공급 공약은 주거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서 의미가 있음
- 그러나 최근 심화되고 있는 주거불안문제와 주거비부담 급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정부개입을 통한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볼 때 국민의당의 공약은 매우 지엽적이고 한계가 명확함. 도시지역의 주거불평등 완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지향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거안정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무주택서민의 주거권을 강화하는데도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

④ 정의당

- 주택시장의 안정화, 서민주거지원, 주택정비사업의 문제해결 등 전체적인 주거안정화를 위한 정책을 포괄적으로 제안하고 있어, 우리사회가 겪고 있는 주거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고 있으며, 주거 불평등 해소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접근을 하고 있음.
- 우선 반값 임대 공정주택을 연간 15만호 이상 공급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려 한다는 점에서 가치와 개혁성이 돋보임. 또한 소득하위 20% 이하 무주택자에게 주거비 지원을 월 20만원 수준으로 상향하고, 전월세상한제 실시,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 공정임대료 도입 등 철저히 주거약자를 위한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음.
- 여기에 임대소득과세 정상화, 전세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후분양제 이행, 주거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의 주거지원 등 최근 우리사회가 겪고 있는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가장 실효적인 대책을 제시하고 있음.

2) 구체성

① 새누리당

- 빈집과 행복주택을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공약은 구체적인 목표치와 재원조달방안 제시하고, 세입자의 권리강화, 주거비 지원 확대, 전월세 증가속도 조절을 위한 정책 제시 등 주거안정에 필수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아 공약의 완결성이 매우 떨어짐. 주택공급과 매매, 임대차시장에 대한 공약이 전혀 없음.
- 신혼부부와 노인의 임대주택 수요는 대도시에서 크게 나타나는데, 각각의 공급량이 적고 어느 도시에 얼마만큼 공급할 것인지도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음.

② 더불어민주당

-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소득계층별로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복지국가 건설 공약 그리고 주거세입자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 도입 등에 있어서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구체성을 담고 있으며 상당한 완결성을 갖추고 있음.
- 장기공공임대주택과 쉼어하우스 임대주택을 통한 주택의 공급,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그리고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등의 구체적인 실천방안 제시하고 있음. 또한 주거복지를 위한 국가의 구체적인 달성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실천방안도 함께 제시하고 있음
- 다만, 제시된 공약에 대한 임기동안 연도별 추진계획이 잘 제시되어 있지 못하며 우선순위도 부재함. 또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구체적인 실현 방안도 없음.

③ 국민의당

- 홀몸 노인들을 위한 경로당 쉼어하우스 공급, 청년세대의 주거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청년희망임대주택 공급이 임기 내 목표치나 재원조달방안 제시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부실하고 구체적이지 못함. 새누리당과 동일하게 홀몸 노인과 청년 등 일부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대책 외에 근본적으로 주거불안을 해소할 아무런 대책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④ 정의당

- 반값 임대 공정주택 공급과 소득하위 20% 이하 무주택자 주거비 지원 확대, 전월세상한제 실시,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 공정임대로 도입, 임대소득과세 정상화, 전세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후분양제 이행 등에 대해 매우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가장 높은 수준의 완결성을 갖추고 있음.
- 공공주택의 공급방식, 전월세문제의 해결방식, 주택가격안정을 위한 대안제시 등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다만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소득하위 20% 이하 무주택자 주거비 지원 확대의 경우, 공약 이행에 따른 구체적인 재원조달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아쉬움이 있음.

3) 적실성(실행가능성)

① 새누리당

- 빈집 정비 매년 600호 정도, 신혼부부 특화단지 17년까지 최대 10개 조성, 공공실버주택 단지 매년 800호 지속 공급이 공약의 내용이나, 이러한 공급물량으로 서민주거안정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임
- 도시 빈집 정비를 위한 특례법 제정, 지자체별 빈집 정비 기본계획 수립, 빈집 관리 정보체계 구축, 토지수용권 등 제도 마련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지도 의문임
- 또한 행복주택의 공급은 부지가 한정적이고 입지도 주거에 적합도가 떨어지는 곳이 대부분이어서 이곳에 자녀양육과 노인복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음

② 더불어민주당

- 정책은 구체적이지만 그동안 제안되었던 주거복지 정책들과의 차별성이 부족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재원조달과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문임. 장기공공임대주택 85만호, 쉼어하우스 임대주택 5만호 공급의 실현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한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의 대폭 확대는 사회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많은 논란이 예상되며, 이에 따라 실현가능성이 불투명해질 수도 있음

③ 국민의당

- 컴백홈법은 정년세대의 주거문제를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특별법을 제정한다는 의미에서는 높이 평가받아야 하지만, 내용이 부실하고 구체적이지 않아 원론적 수준에 머물러 있음. 홀몸어르신을 위하여 공동숙소의 마련을 통한 주거제공은 반대로 주거의 빈집화를 발생시킬 수 있어 대안마련이 필요함
- 더불어민주당 공약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을 활용한 청년희망임대주택 공급 확대는 논란이 예상되며, 이에 따라 실현가능성이 불투명해질 수도 있음

④ 정의당

- 정의당의 서민주거안정 공약은 주거불안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강한 의지와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어 가장 뛰어남.
- 그러나 반지하·옥탑방·고시원 탈출을 위한 안심대출과 표준임대차계약서 의무화를 제외하고 투기수단으로서의 주택에 대한 잘못된 국민의식과 고착화된 부동산시장 구조 개고, 기득권의 반발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가 가장 관건임 ☹☹☹

[경실련 20대 총선 정당 공약평가]

3. 노인 공약

1. 평가단 구성

김진수(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정창률(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남현주(가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남은경(경실련 사회정책팀장)

2. 정당별 노령사회 대비 공약 비교표

구분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공적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인 1연금 체계 구축 : 경력단절 주부, 청년 취·창업자 국민연금 혜택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등 없는 기초연금 지급 - 소득 하위 70% 어르신에게 20만원 균등 지급, 단계적 30만원 인상 최빈곤층에 기초연금 혜택 - 기초생활급여 소득 조사에서 기초연금 제외 국민연금 삭감 중지 - 명목 소득대체율 최소 45%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 폐지 노인복지예산 5년간 3% 증가율 유지 일자리 유지 및 고령자 사회보험료 국가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양 의무자 폐지 공적연금 하나로 OECD 평균 수준 노후소득 보장 - 명목 소득대체율 50% 인상과 사각지대 해소 보험료 지원 확대 -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 폐지, 대상 / 급여 확대
일자리 및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맞춤형 복지 - 어르신 의료비 정액제 - 치매3대 고위험군 원스톱 서비스 - 건강백세운동교실 및 건강마일리지 확대 - 홀몸어르신 돌봄서비스 강화 - 노인복지관 기능 확대 어르신 일자리 - 어르신 일자리 대폭 확대 및 처우 개선 - 맞춤형 평생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효자방지법 도입 노인 일자리 창출 : 일자리 수, 수당 2배 인상 저소득 어르신 만성질환 약값 인하 경로당을 종합 복지서비스 제공 시설로 확대 주택연금제 개선으로 은퇴 후 소득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 빈곤 제로를 위한 로드맵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2배 확대 및 본인부담금 경감 어르신 일자리 : 일자리 수와 수당 2배 확대, 관련법 제정 운동교실 확대/실버특구 조성/공공 노인장기요양시설 확대/경로당 개선 청년과 어르신의 경험주교받기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후문화 지원 은퇴자협동조합 등 사회경제공동체 지원 강화 노인 맞춤형 실버임대아파트 확대 국공립 장기요양시설 확대 및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3. 평가지표

평가 지표	세부 평가 기준
공약의 가치성 (개혁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가? -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가? - 국민의 참여와 권익을 강화하는 정책인가?
공약의 구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약이 구체적이고 완결적인가, 적절한 범위인가? - 임기동안의 연도별 추진 계획이 잘 제시되었는가? - 제시한 공약의 목표는 적절하게 제시되어있는가? - 공약에 따른 예산 배분 계획 및 자원 확보 방법이 적절한가?
공약의 적실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약 목표가 국가 현황에 적정하게 설정되어있는가? - 공약이 해당 정책 환경과 얼마나 부합하는가? - 권한에 부합하고 임기내 달성가능(실현가능)한 공약인가?

4. 총평

- 각 정당 모두 노인 공약은 종합적이지 않고 좁은 영역에 국한됨. 모든 정당이 노령화에 따른 노인문제 등에 대한 대책 인식 부재함. 따라서 4당 모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근소하게 높은 평가를 받는 정도임.
- 새누리당은 다양한 공약을 열거했지만, 재정지출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기존 정책을 재탕하는 수준임.
 - 더불어민주당은 상대적으로 노인 소득보장에 대한 다양하고 개혁적 대안을 제시했지만, 재원마련과 사회적 합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부족함.
 - 국민의당은 다양한 노인 복지 서비스 공약을 제시했지만 시급성은 다소 낮고 구체적 근거도 부족해 노인복지 확대에는 미미할 것으로 보임.
 - 정의당은 우리나라 노인문제를 비교적 정확하게 진단하고 개혁적인 정책과 재원확보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했지만, 사회적 수용성이나 기존 제도와의 마찰 등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정밀한 추진계획이 제시되어야할 것임.
- 새누리당을 제외한 3개당은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기초연금 확대 및 국민연금 개선방안을 제시함. 기초연금 인상과 국민연금 연계 폐지를 통한 무차등 지급,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과 연

정책연구실

2016년 3월 4일

제한 급여지급 폐지, 국민연금 삭감중지 또는 인상 등은 심각한 노인빈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나 재정마련 및 사회보장제도의 장기적이고 건전한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보다 정밀한 대책 제시는 미흡함. 특히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폐지는 현재 연금방식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제시하고 있으나, 합리적인 연금방안이라고 보기 어려움. 더불어민주당의 주택연금제 개선, 국민의당과 정의당의 공공 장기요양시설 확대 공약, 실버임대주택 확대 등은 주목할만한 정책임.

5. 세부평가

1) 가치성(개혁성)

① 새누리당

○ 다양한 공약을 제시하였으나, 전반적으로 기존의 내용을 반복한 것으로 파악됨. 국민연금의 추가납부 허용은 수차례 나왔던 정책이고, 두루누리 사업 확대는 효과가 없는 사업을 반복하는 것임. 어르신의 단순한 일자리 확대보다는 능력에 맞는 일자리와 부합하는 처우 등 근본적인 대책이 제시되지 않아 보여주기식 공약에 그침. 어르신 진료비 부담 역시 실제 변화 자체가 미미해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임. 치매환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치매 고위험군에게 원스톱 서비스 제공하고 예방차원의 운동교실을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임.

② 더불어민주당

○ 노인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소득보장 방안이 제시됨. 기초연금 인상 및 차등 없는 기초연금 지급은 노인 빈곤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공약이라고 볼 수 있지만 추가 재원 마련과 사회복지의 효율성을 고려하면 기존 제도발전 방향과는 역행함.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기초연금 연계를 없애 혜택을 강화하는 정책은 최고 빈곤층 노인을 위한 적절한 대책이고, 주택연금제 개선과 만성질환 노인의 약값을 인하하는 공약은 생계유지가 어려운 노인에게 현실적인 도움이 될 것임.

○ 노후 소득보장이 이루어지지 못한 현세대 노인에게 주택연금제 개선은 바람직한 정책 방향임. 그러나 불효자방지방의 경우 법 만능 주의에 빠질 위험이 있고, 제시된 노인일자리 확대방안은 기존의 일자리 유형만을 나열해 개선점을 찾기 어려움. 사회서비스 공단 설립은 공기업에 대한 민감한 여론을 감안할 때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지 다소 의구심이 듦. 지역사회 내 경로당이 명확

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 어르신 종합복지센터로 전환하고 일상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제안은 긍정적임.

③ 국민의당

○ 일부 긍정적인 공약이 있으나, 대체로 종합적이지 못하고 부분 영역에 한정되어 있음.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은 노인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향임. 공공노인장기요양시설 확대 역시 요양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경우 대상자를 2배 확대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음.

④ 정의당

○ 노인 빈곤문제와 사회서비스(노인장기요양)제도의 문제점으로 제시되어 왔던 내용을 파악하고 이를 공약으로 제시함. 노후소득보장의 획기적 확대가 예상되나 상당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어 차후 발생할 재정 및 형평성 문제 해결을 위한 추진 계획이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함.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일상생활수행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노인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건강한 노인들의 주거시설은 거의 확보되지 않고 있음. 이를 위한 대안으로 실버임대아파트 확대는 참신한 방안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국공립 장기요양시설 확대도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임.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폐지는 현재 부양의무자 기준이 가지는 문제점에 근거한 공약이나, 자칫 제도의 근본을 위협할 수 있는 요소라는 점에서 한계를 보임.

2) 구체성

① 새누리당

○ 노인의 소득보장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임. 그러나 공약의 실제 범위가 좁고, 종합적이지 못하여 이를 이루더라도 추진 계획에 의미를 두기 어려움. 의료비 정액제와 치매고위험군에 대한 공약은 실현가능성이 있으나, 장기적인 관점보다는 단기적인 성격임. 무엇보다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제시된 공약이 적절하다고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음.

② 더불어민주당

○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나라 노인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공약을 제시했다고 평가할 수 있음. 연도별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나, 재원확보에 있어서는 가장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구체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음. 다만 저소득 어르신 만성질환 약값 인하 공약은 의료쇼핑을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이 함께 제시되지 않아 한계를 보임.

③ 국민의당

○ 공약에 따라 제시한 예산에 대해서 연도별 소요재원이나 재원조달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으며 우선순위 등 추진계획 역시 제시되지 못함. 노인복지 예산 5년간 3% 확대는 다른 취약계층과 비교해 어떤 의미가 있는 지 확인하기 어렵고, 3% 확대로 제시한 공약을 감당할 수 있는지 의심스러움. 노인복지서비스에 있어서 다양한 서비스 공약은 새로운 영향을 보일 것으로 판단되나 대상이 다른 노인장기요양과 노인돌봄서비스를 통합하겠다는 이유와 방법을 설명해야 함.

④ 정의당

○ 법인세 최고세율 25%로 원상회복 등 다양한 세목 개선을 통해 재원확보방안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연도별 추진계획은 제시되지 않음.
사회보장에 있어서 급격한 변화는 상당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약의 성격 상 추진 계획이 구체적일 필요가 있음. 공적연금에 대한 인상은 기존의 방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에서 제도의 구체성이 전제되어야 함.

3) 적실성(실현가능성)

① 새누리당

○ 노인 빈곤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실현하더라도 노인빈곤 문제에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됨. 또한 많은 노인 관련 공약들이 이미 법제화된 내용으로 실현가능성은 높으나 현 노인문제를 개선하기위한 시급한 과제로 보기 어려움.

② 더불어민주당

○ 노인관련 공약들이 노인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여 국가 현황에 부합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음. 공약이행을 위한 소요재원 규모와 재원확보 방안도 4개 당 중 가장 구체적으로 제시했음. 국민연금 삭감 중지,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과의 별도 적용은 재정문제와 형평성, 기존 제도운영 방향을 전면 개선하는 방안이므로 사회적 합의를 포함한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어야 실현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

③ 국민의당

○ 기초연금 연계 폐지 방안 등의 공약에 대해서 노인빈곤 해소에 대한 국민의 욕구가 반영된 공약이라 판단되나,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 폐지는 실현 과정에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위험이 있음. 국민의당은 상대적으로 건강한 노인을 위한 공약으로 보이는 흥미로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경로당의 쉼어하우스 전환 · 세대협력형 취업강화훈련 등이 과연 현재 노인들의 욕구를 제대로 반영한 것인지, 이러한 새로운 시도가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급하게 시행되어야 할 것인지, 이를 통하여 기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듦. 또한 다양한 노인복지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사업과 연계 및 조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짐.

④ 정의당

○ 정의당은 공적연금 하나로 노후소득을 보장한다는 공약은 앞으로의 비전으로서의 제시가 가능하나 현 단계에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과 단계적 실현방안 제시해야 보다 실현가능함. 

[경실련 20대 총선 정당 공약평가]

4. 보육 공약

1. 평가단 구성

- 정창률(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경실련 사회복지위원장)
- 남현주(가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이상은(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팀장)

2. 정당별 보육 공약 비교표

구분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누리과정 및 보육시설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확충 - 유치원 수용계획에 따라 공립 유치원 지속 확대, 국가 재정 및 환경 여건 고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육예산 100% 중앙정부 부담 국공립 어린이집 전체의 30%까지 단계적 확대 국민연금기금 보육시설 확충에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및 누리과정 국가책임 강화 - 주민자치센터 1개소 당 1개 보육시설 원칙 - 누리과정 국가책임 강화 (지방교육재정교부율 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누리과정 100% 국고지원 국공립어린이집 확대(대기자수 26만명 해소) - 어린이집 미설치지역 445개 우선 설치 민간어린이집 서비스 향상 - 교사 처우 개선 - 우수교사 양성시스템 도입 - 국공립 전환시 인센티브 부여 - 지역 보육거점센터 운영
보육 여건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 영아종일제 돌봄 확대 - 현재 0세~1세(24개월)까지 지원하고 있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2세(36개월)까지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준보육비용 수준의 보육료 지원, 학부모 추가 부담 방지 육아휴직 급여 인상 - 현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월 통상임금의 10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 일·가정 양립을 위한 아이돌봄체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육료 현실화 및 보육교사 등 종사자 처우개선 육아휴직 확대 / 육아휴직 급여 인상(40%→50%) 육아휴직 신청 시 대체인력 채용 의무화 대체인력 사용에 따른 민간기업의 추가비용 정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육아휴직 파파퀴테제(아빠의무휴당제) 3개월 추가 가족돌봄 휴가 도입,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기간 확대 초과보육 폐지, 보육교사 확대, 보육 119 도입

3. 평가지표

평가 지표	세부 평가 기준
공약의 가치성 (개혁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가? -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가? - 국민의 참여와 권익을 강화하는 정책인가? <p>정책공약이 나라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담고 있는가?</p>
공약의 구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약이 구체적이고 완결적인가, 적절한 범위인가? - 임기동안의 연도별 추진 계획이 잘 제시되었는가? - 제시한 공약의 목표는 적절하게 제시되어있는가? - 공약에 따른 예산 배분 계획 및 자원 확보 방법이 적절한가? <p>정책공약이 육하원칙에 의거 명확하게 유권자가 이해할 수 있는가?</p>
공약의 적실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약 목표가 국가 현황에 적절하게 설정되어있는가 - 공약이 해당 정책 환경과 얼마나 부합하는가 - 권한에 부합하고 임기내 달성가능(실현가능)한 공약인가 <p>정책공약이 시급성과 정책 환경에 부합하고 실현 가능한가?</p>

4. 총평

- 더불어민주당-정의당-국민의당-새누리당 순으로 높게 평가됨. 더불어민주당은 구체성과 적실성 지표에서 가장 높은 평가 받았고 정의당은 가치성 지표에서 가장 높게 평가됨.
- 각 정당이 공통적으로 보육관련 공약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음. 새누리당은 공약은 보육에 대한 비전은 물론 단기적인 연차별 계획조차 제시하지 못하여 저출산과 여성들의 양육부담 완화 욕구에 대한 대응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의 보육 관련 욕구에 대응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포괄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있음. 국민의 당은 보육 관련 이슈들에 대응하고자 하면서도 더불어민주당에 비해서는 소폭의 공약을 제안함으로써, 실현가능성은 높으나 국민들의 보육 관련 욕구를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지는 의문임.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 보다 더 포괄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재원 마련 등 실현가능성은 낮음.
- 모든 당에서 국공립보육시설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새누리당은 예산을 고려하여 한다는 등 실제 실천의지는 높지 않음.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2016년 현재 약 500조원의 국민연금기금 중 일부를 금융부분에만 투자하지 않고 부족한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혁적이며 실현가능함. 국가의 책임성 강화측면에서 정부의 직접 투자를 통한 시설확충방안이 제시되지 못한 것은 근본적인 한계로 지적할 수 있음.

- 누리과정 등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는 새누리당을 제외하고 3당에서 모두 공약을 제시하여 중앙정부의 책임에 의한 보편적 보육에 대한 요구를 적절히 반영했다고 보여짐. 재정부담 갈등을 유발했던 새누리당은 이에 대한 공약을 제시하지 않아 책임성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음.
- 육아휴직 급여 인상(혹은 파파쿼터제)을 새누리당을 제외하고 3개 야당에서 모두 제시하고 있는데, 실제 육아휴직급여 문제는 급여수준의 문제라기 보다는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어려운 환경에 대한 것인데 이에 대한 대안을 국민의당만 제시했으나, 국민의당의 대안 역시 검증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5. 세부평가

1) 가치성(개혁성)

① 새누리당

- 새롭거나 개혁적인 공약으로 보기 어려우며, 수준도 4년 전보다 후퇴함.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는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는 필요한 서비스로 지난 대선 공약으로 제시됐지만 이행되지 못함. 소득계층에 따른 선별적 지원으로 이용률이 줄고 있고, 본인부담률 증가로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함. 보육재정 부담에 대해 갈등해소방안을 제시하지 않아 보육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설정했다고 보기 어려움.

② 더불어민주당

- 국민이 납부한 국민연금기금을 수익률이 불확실한 금융부분에 투자하지 않고 사회투자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가치있는 공약임. 육아휴직급여 인상은 현재 급여이용의 장벽이 높은 상태에서 급여만 인상시킬 경우 격차만 크게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아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제기가 필요함.

③ 국민의당

- 국공립시설 확충과 종사자 처우 개선, 누리과정 국가책임 강화는 바람직한 정책제시이며, 유아휴직 실효성 확보방안을 제시한 점은 개혁적임. 아이와 대중교통 이용시 부모요금 무료공약은 근거가 미약함.

④ 정의당

- 보육문제에 대한 인식도 타당하고 다양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으며, 보육정책의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바람직한 미래상을 담고 있음. 출산 시점부터 임신부 및 영유아 방문건강관리제도와 출산 시 마더박스 제공 등의 복지지원의 필요성을 제시한 측면이 다른 정당과 구별되는 것으로 개혁성이 높음.

2) 구체성

① 새누리당

- 구체적 계획이 필요없는 단편적 대책임.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확충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재정과 환경 여건을 고려하여 추진하겠다고 하여,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제시하지 않음.

② 더불어민주당

- 보육 재정 측면에서는 중앙정부 100% 책임, 보육료 지원 수준을 표준보육비용 수준으로 인상, 육아휴직급여의 40%에서 100% 인상(그리고 최저 및 최대급여 수준의 명시) 등 각 공약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음. 예상지출을 제시하고 이를 초과하는 예산확보 방안을 제시한 것은 매우 적절한 시도임.

③ 국민의당

- 보육료 현실화, 보육종사자 처우개선, 누리과정 국가책임강화(지방교육재정교부율 인상), 출산 및 육아 휴직 미부여 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의 경우 그 수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방향만 제시함으로써 공약의 구체성이 약함. 육아휴직근로 실효성 강화에 대해서 대체인력 채용

의무화는 자칫 육아휴직에 대한 장벽을 오히려 강화하는 역효과도 우려됨. 국공립보육시설 역시 1년에 몇 개씩을 확충할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나타나 있지 않음. 재정지출 계획은 나타나 있으나, 이를 어떻게 확보할 지에 대해서는 나타나 있지 않음.

④ 정의당

- 정책 실행의 수준과 범위를 명시해 구체성 높음. 육아휴직 관련 공약은 구체성 떨어짐. 다만, 다양한 정책 제시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추진계획이 연도별로 구체화되지 못한 점은 한계임. 예산 확보방안으로 사회복지세 신설을 제시했으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보다 정교한 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3) 적실성(실행가능성)

① 새누리당

- 아이돌봄서비스는 공약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실행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됨. 반면,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확충 부분은 구체적인 공약 제시가 미흡하여 그 실행가능성도 약한 것으로 보임.

② 더불어민주당

- 국공립 어린이집 30% 확충을 위하여 국민연금 기금을 사용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함.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계획은 좋으나 이를 위해서는 책임성 있는 추가적인 재원 조달이 이루어져야 함. 국가적으로 초저출산 등의 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한결같은 예산 부족 문제에 대해서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한 대안 마련은 문제의 시급성에 걸맞는 대응이라고 판단되나,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적 활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실행가능성 낮음.

③ 국민의당

- 누리과정 재정의 중앙정부 책임 100% 보다는 중앙정부 책임 강화가 이를 통해 재정의 역할분담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면 더 현실성이 있다고 보여짐. 육아휴직 확대와 육아휴직 급여 인상 제안은 실행가능성은 높다고 생각됨. 육아휴직 급여의 경우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지만, 최대급여와 최소급여(각각 100만원과 50만원)의 변화에 대한 제안이 없

음. 최대급여와 최소급여의 변화 없이 소득대체율 10% 인상만으로는 그 효과가 제한적일 것임.

④ 정의당

- 전반적으로 국민들의 임신, 출산, 육아 과정에서의 욕구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으나,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정책으로 실행가능성은 낮음. 

20대 총선을 위한 시민연대 모임

주상운 이천·여주 경실련 사무국장
jsu64@hanmail.net

새로운 시대를 여는 책임을 가지고 시작하였던 19대 국회의원들이 임기가 어느덧 끝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존재감마저 사라져버리고 있는 19대 국회의원들이 20대 총선을 준비하느라 이래저래 바쁜 가운데 공천여부에 따라 희비가 갈라지는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지없이 기대가 짓밟혀졌지만 또 다시 새로운 기대를 갖고 총선을 준비하여야 하는 시민단체로서 허탈함도 있지만 더 나은 우리 사회를 이루기 위하여 힘차게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이천지역사회는 지난 10년여 동안 시민들의 염원이었던 전철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교통량이 많은 3번 국도의 숨통을 터줄 자동차 전용도로가 완공단계에 있으며, 종합병원급 의료원이 착공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수도권정비보호법의 여파로 많은 규제를 받고 있는 상태에 있어 주민들의 요구는 다방면으로 탈출구를 찾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사회의 요구를 감당하며 시민들의 뜻을 한데 모으는 일을 몇몇 시민단체가 하고 있는데 경실련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늘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경실련을 비롯한 3개 단체가 지방선거를 비롯하여 총선을 맞이할 때마다 함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총선을 준비하며 각 단체는 이미 지난해 말부터 연대 활동에 대한 계획을 2016년의 계획에 포함시켜 총회를 통과하였습니다. 그리고 1월초부터 각 단체의 실무자들이 모여 총선준비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설정하고 각 단체가 감당할 역할분담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총선대응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민 생각 나눔

이미 예비 후보자들이 등록하기도 전인 작년 11월 말 시민패널을 초청하여 20대 총선을 준비하는 간담회 성격의 '시민생각나눔'이라는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19대 총선 당시를 돌이켜 보며 20대 총선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과 기대들을 술자리나 몇몇 지인들만의 자리가 아닌 공식적인 자리로 이끌어냈다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2. 선거 캠페인 및 시민정책 제안

캠페인활동은 2회에 걸쳐 함께 하기로 하였습니다. 첫 번째 캠페인은 시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터미널과 공원을 중심으로 시민들의 정책제안을 받는 프로그램을 병행하였습니다. 시민들로 하여금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나 지역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제안을 스티커에 기록하여 보드에 붙이는 퍼포먼스를 겸하는 행사입니다. 추후 이 제안들을 정리하여 분야별로 분석하여 보도자료를 발표하면 후보자들이 시민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캠페인은 선관위와 함께 여러 단체의 회원들이 가두행진을 하며 선거참여를 독려하는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3. 후보자 공약 분석 및 평가

후보자 등록이 마감된 후 5일 정도면 유권자들에게 전달될 후보자들의 공약이 담긴 선거공보물이 나옵니다. 이 공보물을 입수하여 3개 단체의 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전체 공약을 모아 분야별로 정리하여 분석해 보면 금번 20대 총선을 대하는 우리 지역 후보자들의 성향이 극명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공약에 대한 평가는 공약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일정한 평가틀을 가지고 하게 됩니다. 연대활동을 하지 않는 지역경실련에서 이 평가를 할 경우 시민평가단을 모집하여 진행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경실련 경기도 협의회 소속 지역 경실련에서는 이런 방법과 평가틀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4. 후보자 초청 정책 토론회

후보자 등록과 함께 후보자들에게 정책질의서를 전달하고 토론회 참석 동의를 받는 일련의 작업이 수일 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연대활동의 긴밀한 협조가 가장 빛을 발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후보

자들 간 치열한 기싸움으로 인해 사소한 이유로 토론회를 거부하는 후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여러 단체가 연대하여 활동을 하다 보니 후보자를 설득할 사람도 쉽게 확보할 수 있어 여러 모로 유익합니다.

5. 당선자 평가 활동

이천 지역에서 선거를 위하여 연대활동을 하는 단체들은 선거를 위한 일회성 회합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연대하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 이후 당선자들의 공약 이행정도에 대해 지속적으로 평가를 하여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책자를 발행하며 상을 주기도 합니다. 이런 지속적인 활동이 있기 때문에 선거와 관련하여 경실련을 비롯한 3개 단체의 활동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전폭적인 신뢰를 받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서로 다른 성격의 시민단체들이 한 가지 일을 위하여 이렇게 유기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은 한 두 번의 함께 하는 정도로 어려운 일입니다. 재정적인 동참, 참여 및 동원 인력의 확보, 지역 사회를 사랑 하는 마음이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개인은 어렵지만 시민단체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천·여주 경실련이 있습니다. ☺☺

“투표를 잘해야 합니다.” “흙수저에게 꿈과 희망을”

— 경실련 20대 총선 유권자운동본부 발족 —
— 5대 분야 정책과제 발표 —

김삼수 경실련 정치사법팀장
peace@ccej.or.kr

20대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어느 선거 때보다 유권자들의 관심은 멀어지고 있다. '비박 공천학살'에서 보여준 오만한 새누리당, 김종인 비례대표 5선의원이라는 기록만을 남긴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파동', 새정치와 미래 보다 '몸싸움과 구태'에 빠진 국민의당 등. 현안에 대한 해법과 미래에 대한 비전은 찾을 수 없다. 새로운 인물도 없다. 20대 국회는 역대 최악의 국회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점점 현실이 되고 있는 듯 하다.

가계부채 1200조원, 청년실업률 9.3%, 재정적자 167조 원, 전월세가격 42개월 연속 상승 등 파탄난 서민경제와 장기 침체에 빠진 경제는 좀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선거는 예정대로 치러질 것이고, 국가의 미래도 결정될 것이다. 절망 속에서 희망을 품 듯 일명 흙수저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4·13총선이 되어야 한다. 어느 때보다 투표를 잘해야 하는 이유다.

‘투표’ 나와 나라의 미래를 바꾸는 시민의 한수!

유권자들은 안중에 없이 기득권 유지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정치권에 국민들은 또다시 분노하고 있다. 총선을 불과 42일 앞둔 시점에서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질 때부터 이미 예견된 일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무원칙한 공천으로 불복과 갈등이 거듭되면서 국민들의 혐오와 무관심만 더욱 키웠다.

경실련은 이번 선거가 민생을 살리는 정책선거가 되기를 기대했다. 양극화와 불평등의 심화로 모두가 힘들다고 외치는 상황에서 정치권도 당연히 국민들의 생존 문제에 최우선적으로 나설 것이라 여겼다. 하지만 각 당이 마지못해 내놓은 공약은 부실하기 짝이 없다. 민생은 실종되었고, 과거 내놓았던 공약의 재탕, 삼탕에 불과하다.



이제 나와 미래를 바꾸기 위해 유권자들이 나서야 한다. 정당과 후보자들의 자질과 정책을 철저히 검증하여 민생과 서민 중심의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선거과정에서 각종 부정·비리를 감시하고,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도 유도해야 한다. 20대 총선이 기존 정치에 대한 불신을 새로운 정치에 대한 희망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도록 유권자들의 단호한 입장이 요구된다.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정치인, 국민을 위해 희생하는 정당이 선택되어야

정당은 기득권이 아닌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책을 내놓고 국민의 판단을 구해야 한다.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어떠한 선거개입 행위도 용납될 수 없다. 후보들 역시 민생경제 회복과 국가발전을 위한 정책선거로 경쟁해야 한다. 책임질 수 있는 공약을 제시하고 흑색선전·비방이 아닌 깨끗한 선거에 나서야 한다.

유권자들은 포플리즘, 장밋빛 공약에 더 이상 현혹되어선 안 된다. 지역감정, 정당바람에 휩쓸리지 말고 진정한 국민의 대표를 뽑아야 한다. 무엇보다 유권자 자신과 나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

경실련은 3월 16일 '20대 국회의원 선거 유권자운동본부'를 공식 발족하고, 하위40%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다 같이 잘 사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활동에 적극 나섰다. 기득권이 아닌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도록 유도하고, 일자리·주거안정·복지 등 생활밀착형 정책으로 민생이 우선되는 선거를 만들고자 한다.

양극화·불평등 해소와 민생회복을 위해

이를 위해 ▲경제양극화와 불평등 해소(재벌개혁, 조세정의 실현,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민생회복과 복지강화(서민주거안정, 공보육정상화, 노후소득보장강화, 소득중심 건강보험료 부담, 청년문제 해결), ▲신뢰할 수 있는 정치개혁(상시국회, 선거제도 개혁, 국정원개혁), ▲중앙권한 지방이양을 통한 분권강화(재정분권 실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실현(남북 상호의존 확대) 등 5대 개혁과제를 발표하고, 각 정당과 후보자의 공약을 철저히 검증 할 계획이다.

먼저 우리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재벌개혁을 통해 경제양극화와 불평등 해소하고, 경제민주화를 실현해야 한다.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출자단체를 지주회사-자회사의 2단계로 제한하고,

상장회사의 자회사 지분 보유비율을 최소 30%로 하고, 지주회사 부채비율도 현행 200%에서 100%로 정상화해야 한다. 또한 집중투표제 및 전자투표제 의무화, 징벌적 손해배상제 및 집단소송제 도입, 금산분리 강화 등도 요구된다. 아울러 조세형평성 제고를 통한 소득재분배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현행 1억5000만원 초과 소득자에 38%의 세율을 적용하던 것에서 3억원 초과 고소득자에 대해 최고세율 42%를 부과하도록 소득세 최고 과세표준을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인상해야 한다. 법인세를 정상화하고, 가업상속 공제제도도 폐지해야 한다.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비정규직 차별을 개선하고, 적정수준의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한다.

둘째, 민생회복과 복지강화를 위해 삶의 질과 직결되는 서민주거안정이 절실하다. 서민들의 주거불안은 미래의 희망을 앗아가고 생존권까지 위협하는 상황이 되었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인상을 상한제 도입에 적극 나서야 한다. 세입자가 임대료를 지급하고, 쫓겨나가야 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한곳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는 필수적인 제도다. 출산률 제고를 위해 영유아 보육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국공립 보육시설을 30%까지 확충해야 한다. 노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개선해 노후소득 최저생계비도 보장해야 한다. 건강보험 부과체계도 소득중심으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청년실업률이 역대 최고를 갱신하고 있고, '삼포세대', '헬조선'이라는 용어가 탄생하는 상황임에도 청년들의 삶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고액의 등록금, 취업, 주거, 노동 등 생활전반에 청년들의 고통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희망과 미래를 위한 청년문제 해결도 시급하다. 우선 조건 없는 진짜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여 청년 일자리를 확대해야 한다. 청년수당을 도입하고, 고용보험 혜택을 통한 청년 복지제도도 강화도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신뢰회복을 통한 정치개혁도 필요하다.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국회가 기득권 유지에만 혈안이 되어 있고,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하다. 국회의원 윤리위원회를 강화하고, 연중 상시국회운영과 상시 국정감사를 도입해야 한다. 비례성 강화와 지역주의 완화를 위해서 독일식 정당명부제 도입도 필요하다. 최근 테러방지법 국회통과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되었던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방향에서의 국정원 개혁도 요구된다. 테러방지법의 악법조항을 수정하고, 국정원에 대한 국회의 민주적 통제도 강화해야 한다.

넷째,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통한 분권 강화다. 지방자치가 2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중앙집권적 통치체제는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이라는 지방정부의 기본 역할에 한계를 가져오고 있다. 새로운

시대에 걸 맞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역할 재정립이 절실히 요구된다.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정책대안 마련,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앙정부의 과감한 재정권한 지방이양이 요구된다. 우선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호나한 지방소비세를 현행 11%에서 20%까지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행 80대 20에서 60대 40으로 조정해 나가야 한다.

다섯째, 북핵문제가 과거와는 질적으로 달라진 상황에서 한반도 정책의 최종목표가 '평화'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고조되는 한반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외교역량을 강화하고 남북간 교류협력의 확대·발전을 통해 남북간 상호의존을 증대시켜야 한다. 개성공단 재개에 적극 나서고 인도적 조치를 확대해야 한다. 압박·제재 중심의 외교를 넘어 대화와 타협을 통한 평화 외교역량의 강화도 필요하다.

투표를 잘해야 한다.

경실련은 20대 총선 주요 사업으로 정당정책검증, 후보자검증, 투표참여운동, 선거부정고발센터 운영에 나선다. 먼저 정책검증과 관련하여, 경실련이 제안한 5대 정책과제를 기초로 해서 각 정당의 공약을 철저히 검증한다. 각 정당의 정책·공약의 차이와 우열을 분석하여 유권자들의 심판을 위한 정보제공하고, 헛공약, 민생외면 공약도 선정하여 발표한다.

둘째, 후보자검증과 관련해서는 경제양극화와 불평등 해소, 민생회복과 복지강화, 정치개혁 등을 잘 구현할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인지, 그렇지 않은 후보가 누구인지를 철저히 검증하여 유권자의 심판이 가능하도록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셋째, 나와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투표에 적극 나설 있도록 적극적인 캠페인을 전개한다. 정책적으로 나와 가장 맞는 정당을 골라주는 정당선택도우미(<http://vote.ccej.or.kr>) 프로그램 운영과 청년을 중심으로 한 공명·정책선거 서포터즈 및 시민참여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마지막으로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통한 공명선거 실현을 위해 선거부정에 대한 고발센터를 운영한다.(대표전화 : 02-3673-2141) 새로운 정치를 위해 유권자들이 직접 나서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4·13 총선은 향후 4년간 우리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정치적 사건이다. 일부에서는 '정책없는 선거', '진흙탕 선거'를 비판하며 굳이 투표를 해야 하는지 고심하고 있다. 또다시 구태의연한 정치인들에게 미래를 맡겨서는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투표를 꼭 해야 하고, 또한 투표를 잘해야 한다. 

중앙경실련

사무총장	741-8566	고계현	부동산국책감시팀	3673-2146	국장: 윤철한, 부장: 최승섭, 간사: 윤은주
기획: 총무팀	766-5626	국장: 김한기, 부장: 채준하, 간사: 오세형	(사)경제정의연구소	3673-2144	부장: 권오인
조직교육팀	766-5629	처장: 윤순철	(사)경실련통일협회	3673-2142	부장: 최승섭
회원: 홍보팀	766-5627	국장: 김한기, 간사: 김은혜	(사)경실련도시개혁센터	3673-2147	국장: 윤철한
경제정책팀	3673-2143	부장: 권오인, 간사: 최예지, 정택수, 김지경	시민권익센터	766-5624	간사: 권태환
정치사법팀	3673-2141	부장: 김삼수, 간사: 유애지, 정유림	소비자정의센터	766-5625	간사: 박지호
사회정책팀	3673-2145	국장: 남은경	월간 경실련	766-5626	이사: 음유정, 김용재
국제팀	766-5623	간사: 이현아			

지역경실련

지역경실련협의회	031-253-2266		충청권		
광역시			천안·아산경실련	041-552-2040	국장: 정병인
광주경실련	062-528-4851	처장: 김동현, 부장: 박수민	청주경실련	043-263-8006	처장: 최윤정, 국장: 이병관, 부장: 신명자
대구경실련	053-754-2533	처장: 조광현, 부장: 최은영	경상권		
대전경실련	042-254-8060	처장: 이광진, 국장: 이현호	거제경실련	055-637-9451	국장: 이양식
부산경실련	051-761-3951	처장: 이훈진, 부장: 윤정선, 팀장: 강미라, 배성훈, 간사: 정애니	창원경실련(준)	055-263-0030	국장: 오경환
인천경실련	032-423-2950	처장: 김송원, 팀장: 김성아	경주경실련	054-773-7851	간사: 방현주
경기·강원권			구미경실련	054-453-1787	국장: 조근래
경기협	031-253-2265		포항경실련	054-273-0185	간사: 장현정
광명경실련	02-2614-1224	국장: 허정호, 간사: 최미영	울릉지회	054-791-0085	국장: 김유길
군포경실련	031-392-3111	국장: 오은정	전라·제주권		
수원경실련	031-253-2266	처장: 노건형, 부장: 유병욱	순천경실련	061-751-9993	간사: 장홍영
안산경실련	031-402-6116	국장: 고선영, 간사: 최윤정	여수경실련	061-643-2110	간사: 정은숙
김포경실련	031-997-0044	국장: 이종준, 간사: 황인순	목포경실련	061-283-4571	간사: 김창모
이천·여주경실련	031-635-7575	국장: 추삼운, 간사: 변정해	군산경실련	063-443-5733	간사: 최기자
양평경실련	070-8362-2147	국장: 최갑주	진주경실련	063-273-4903-4	간사: 고통우
강릉경실련	033-645-0828	처장: 심현섭	정읍경실련	063-536-6225	간사: 김은정
속초경실련	033-636-6631	국장: 김경석, 부장: 김경아	남원경실련	063-633-6662	정책위원장: 이점수
춘천경실련	033-636-6631	국장: 권용범, 간사: 오연옥	제주경실련	064-726-2530	처장: 좌광일